

중산층

흔 들 리 는 신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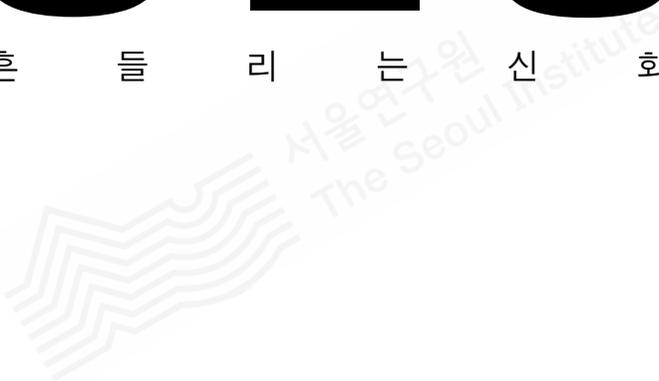
조권중 최지원 지음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중산층

은 들 리 는 신 화



Contents

01 •

중산층에 대한 관심 / 1

02 •

중산층과 사회 불평등 / 9

중산층 연구의 사회적 배경 / 11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접근 / 21

03 •

중산층 형성의 신화 / 27

중산층 신화와 위기 / 29

중산층의 사회의식 / 33

04 •

중산층 분화와 불안 / 41

중산층 계층 분화의 추이 / 43

생애주기적 불안과 세대 관계 / 54

05 •

중산층 지위 형성과 재생산 / 61

중산층 형성 과정 / 63

지위재생산의 문제 / 65

저성장체제의 불평등 구조 / 78

06 •

주택자산과 자영업층의 위기 / 83

주택자산 형성과 활용 / 85

자영업계층의 재생산 위기 / 97

07 •

중산층과 사회정책 / 105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 / 107

중산층 정책의 방향 / 117

08 •

중산층에 대한 우려와 기대 / 129

중산층,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 131

[참고문헌] / 137

01

중산층에 대한 관심



01

중산층에 대한 관심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국내경제가 저성장에 직면함으로써 소득의 양극화와 중산층 감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중산층 복원을 내세우고, 현 정부의 지난 대선 핵심공약이 중산층 70% 재건이었듯이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와 소득감소는 중산층의 감소에서 더 나아가 위기론, 소멸론까지 불러오며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사회 중추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성향은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

이 글은 서울연구원의 기초연구과제 [중산층 분화의 정책적 함의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글은 처음에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기획되었으나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면서 중산층 의제를 알리려는 차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사회 중산층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들의 형성과 재생산기제의 함의를 밝히는 일은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최근 사회적 계층 구성에서 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산층의 개념과 정체성이 재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도시사회 역시 중산층의 분해, 양극화, 빈곤화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의 발전과정에서 중산층의 성장이 중요하였다면, 이제는 중산층 구성의 변화가 미래 서울의 사회적 특성을 보여줄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이슈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중산층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중산층의 규모가 크면 안정된 계층구조를 뜻하고, 그 규모가 작으면 중산층이 분해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규모는 한 사회의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중산층의 의미를 사회의 분배 구조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규모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산층의 규모는 한 사회 자원의 분배상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계층구조와 계층과 관련된 사회 불평등의 이슈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빈곤 문제에 치중하였지만 다른 한 편에서 중산층의 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시기가 끝나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중산층의 분해와 계층구조 양극화의 논의에 관심을 두게 되었

고, 사회의 계층구조에서 중산층의 지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산층의 지위 재생산의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위는 계층 구조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을 뜻한다. 지위는 한 편에서는 소득 분배의 결과일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자산의 사회적 배분 구조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소득과 자산은 사회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결과이기에 중산층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지위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직업적 지위의 획득과정은 직업의 분포와 사회 구성원의 지위 배분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사회가 성장하면 직업의 종류가 더 많아지고,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서 직업적 지위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직업적 지위의 획득은 일차적으로 교육적 성과나 교육 자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적 성과는 개인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교육 기회에서 성과를 낳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지원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계층적 지위의 획득에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부모의 지원이 중요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중산층의 지위재생산 의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 수준에서 노력의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 구조의 특성에서 나타난다. 중산층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신화가 있다. 안정된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적 상황이라면 이 신화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과정에서 불평등한 계층구조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지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의 지위재생산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과정이다. 여기에서 중산층의 논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과정에 집중하게 된다. 중산층이 갖는 사회적 불안은 개인의 장래 불안을 넘어 중산층의 지위 재생산 과정의 불안을 뜻한다.

앞으로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중산층 분화 특성을 밝혀내고, 사회정책의 함의를 찾고자 한다. 중산층 내부 세부구성의 다양성과 특성을 구조적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화’로 개념화하고, 중산층 지위형성과 재생산의 문제를 사회 불평등 구조의 특성과 함께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집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중산층 신화와 위기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고, 기존 중산층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통해 중산층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사회구조와 계층 갈등 문제를 고찰하며,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시각을 중산층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두 번째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서울 중산층의 현황과 계층적 분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산층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산층 내 세대별 분화양상을 통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불안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중산층이 형성되고 지위가 유지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동되는 요인들을 되짚어보고, 저성장체제에서 그러한 요인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상과 이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안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는 중산층 논의에서 주택자산의 역할과 새롭게 부상되는 자영업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는

중산층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논의는 중산층 동향의 정책적·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의 계층구조나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 과정에서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의 역할과 의미를 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중산층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존의 중산층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이슈의 트렌드를 짚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 중산층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 사회 중산층의 모습과 정체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기존의 여러 논의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 논의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중산층과 불평등, 중산층의 신화, 지위재생산의 문제, 세대의 문제, 노후 불안과 자영업 현상, 주택자산의 의미 등 우리 사회 중산층과 관련된 이슈를 사회구조적 시각과 동태적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로 활용한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여러 통계자료 중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명시되지 않아 조사에서 제시하는 수도권 중심의 중산층 집단의 실태를 분석한 점이다. 그리고 중산층 관련 기존 통계자료와 결과 분석들을 활용해 중산층 문제들을 점검하였다. 통계적 접근에서는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통용되는 소득 중심으로 설정한 중간 소득계층이 중산층으로 전제되고 있다. 다음의 글에서 소득 중심의 중간계층 또는 중산층에 대한 접근법의 특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중산층 용어는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산층 용어가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합

의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산층의 실체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중산층은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사용된 의미로 담론과정에서 사회적 실체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음 장에서 중산층 용어와 사회 불평등 연구에서 거론되는 여러 용어를 소개하고 그 중첩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중산층 용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소득 중간층, 중간계급, 중간계층, 중산층 등 여러 용어가 중첩되어 사용될 것이다. 중산층 용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글이 단지 중산층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 구조와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02

중산층과 사회 불평등



중산층과 사회 불평등

중산층 연구의 사회적 배경

중산층에 관한 논의는 중산층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따라 발전되었다¹⁾. 홍두승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에 대한 학문적 인식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는 제한된 영역에서 제시되었기에 특별히 사회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산업화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농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다.

중산층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 유신과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상황에서 중산층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한 편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계급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대상으로 중산층을 설정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중산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산층의 범위를 구중간계급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또는 신중간계급까지 포함시켜 개념

화하기 시작하였다(김영모, 1982). 우리 사회에서 양반, 중인, 평민이라는 신분제와 관련된 전통사회의 인식이 사라지고, 서구 사회의 역사에서 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불평등 구조를 분석한 계급론적 관념에서 중산층의 의미를 중간계급(Middle Class)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특히 정부는 산업화로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산층의 성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중산층 육성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경제기획원, 1985). 중산층 육성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하위계층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중산층은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다. 이는 지금의 중산층 육성정책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산층, 특히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학계나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화 지지세력,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1990년대 후반은 중산층 감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기업 도산, 대규모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산층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언론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위기’ 혹은 ‘몰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국내 언론 및 학계에서는 중산층 감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중산층도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상류층이나 하류층에 비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산층을 위한 조세환경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류상영·강석훈, 1999; 홍성민·민주홍, 1999; 홍석표 외, 2003).

2000년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 증가, 상용직 근로자의 감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조기퇴직 등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소득 양극화의 문제와 더불어 중산층의 위기와 몰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의 중산층 관련 연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 변화와 이로 인해 소득계층이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극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민승규 외, 2006; 신관호·신동균, 2007; 남준우, 2007; 석상훈, 2008; 김용기 외, 2010; 강성진 외, 2010).

소득불평등의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와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생활수준의 차이를 넘어 위화감 및 갈등 증대와 사회적 분열을 가져온다. 이는 곧 사회통합의 위기를 의미한다. 최근 중산층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중산층’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부각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엄밀한 용어이기보다 대중적으로 인식되고 통용되는 성격이 강한 용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거론되는 중산층 개념은 주로 경제 안정이나 사회 안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하고 일부 학계에서는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도 있다.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학계는 중산층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자본소유 여부와 기능상 위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생활양식과 수준을 공유하는 집단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상진(1987), 신광영(2004), 홍두승(2008)은 기

표 2-1 중산층 논의의 변화

연도	시기별 과제	논쟁의 핵심	주요관심
1980년대 중반	민주화	· 사회안정 세력으로서 중산층 · 민주화 지지세력으로서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	정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극복	· 경제위기와 중산층의 위기	경제
2000년 이후 ~ 2015년 현재	사회통합	· 중산층 분화와 양극화 · 사회통합에서의 중산층 역할	정치·경제· 사회 전반

자료: 홍두승·김병조(2008)에서 재구성

존의 마르크스적 계급 개념에서 벗어나 한국의 중산층을 소득, 주택,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을 종합해서 중간적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지위 집단 개념²⁾으로 규정하였다(김경혜 외, 2009).

정치학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집단으로서의 중산층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 사회영역의 민주화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나 정책연구기관들에서 다루어온 중산층 개념은 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중산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극복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홍두승, 2005).

중산층과 관련된 정의는 다양하며, 그 의미와 범위는 연구 분야와 목적,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중산층에 대한 합의된 개념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분류로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구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되며, 중산층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 이상에 달하는

사회학

-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간적 위상을 점하는 집단
- 유사한 생활양식과 수준을 공유하는 집단

정치학

-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 집단 간 갈등 완충 집단으로서의 중간계급에 초점
- 정치적 안정과 사회영역의 민주화 역할

경제학

- 경제극복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초점
- 중간소득계층(가구별 소득분배 기준)으로 규정

그림 2-1 분야별 중산층 논의 특성

계층, 중간소득계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10분위 분류 중 4~7분위, 5분위 분류 중 2~4분위를 포함하며,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0~150%에 해당하는 집단을 포함한다. 학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중산층 기준으로 중위소득 70~150% 또는 100~150%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OECD 기준(1995)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소득의 중간값, 즉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 미만 사이에 해당하는 소득생활자,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류이다. 중산층을 더욱 세분화하여 중하층(중위소득 50~70% 미만)과 중간층(중위소득 70~150% 미만), 또는 한계중산층(중위소득 50~100% 미만)과 핵심중산층(중위소득 100~150% 미만)으로 구분하여 보거나(미래기획위원회, 2009; 이재열, 2009), 중산층 내에서도 중저소득층(중위소득 50~75% 이하)을 추가로 분석(현대경제연구소, 2009)하는 연구들도 있다.

신광영(2008)은 소득계층과 계급론적 시각의 중간계급을 결합하여 중산층을 정의하려고 한다. 중산층 개념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나 소

비수준 정도로 파악하여 중간소득계층의 의미를 강조하면, 중산층은 “도시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간계급과 도시 및 농촌의 뿌띠 부르주아 중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그리고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계급을 포함하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계급이나 소득계층보다는 지위집단, 즉 생활양식,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에 좀 더 비중을 둔 연구는 소득 이외에도 직업, 교육수준, 재산, 주택, 주관적 계층 귀속의식까지 고려하여 중산층을 규정하기도 한다(이재열, 2008). 한상진(1987)은 직업, 수입, 교육, 주택의 4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홍두승(2005)도 계급, 소득, 교육수준, 주택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표 2-3]과 같은 기준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중산층 개념정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도 포괄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정된 직업과 일정한 소득 및 주거 안정 등은 중산층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자본이다. 이러한 생활기회로서의 객관적 요인과 중산층으로서의 귀속의식 및 성향과 같은 주관적 요인이 중산층의 특성을 구성하게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려는 것은 중산층의 정체성과 실체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중산층을 확정하는 기준이 많아지면, 중산층의 규모는 축소된다.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듯이, 국가별로도 중산층의 개념이나 특성에 대해 정의하는 기준이 다양하다.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 중 하나로, 미국 상무부 산하 통계국(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표 2-2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구분

학자 및 연구기관	계층구분 기준
OECD (1995)	저소득층(빈곤층): 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미만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홍석표 외 (2003)	한계계층: 중위소득 50% 미만 서민층: 중위소득 50~100% 미만 중산층: 중위소득 100~150% 미만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미래기획위원회 (2009)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 중하층: 중위소득 50~70% 미만 중간층: 중위소득 70~150% 미만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이재열 (2009)	빈곤층: 중위소득 50% 미만 한계중산층: 중위소득 50~100% 미만 핵심중산층: 중위소득 100~150% 미만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현대경제연구소 (2009)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이상 - 중저소득층: 중위소득 50~75% 이하 고소득층: 중위수 소득기준 150% 초과

자료: 박민진·정우성(2013)에서 재구성

(2010)은 중산층을 ① 미래 계획에 대한 강력한 의지 ② 자신의 운명 통제 ③ 일과 교육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④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 제공 ⑤ 범죄, 빈곤,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한 어려움에서 자신 보호 ⑥ 저축을 이용해 자기 집, 금융자산 등을 소유할 가능성 ⑦ 법 준수를 고려하여 구분한다.

표 2-3 중산층 기준

기준	차원	주요변수		최저기준	
객관적	경제적	생산· 소유관계	직업	명칭 종사상 지위	화이트칼라(신중단계급) 소부르주아지(구중단계급)
		소비· 경제수준	소득	가구소득	중간소득
	사회 문화적		자산	금융·부동산	중간 정도의 자산 (주택, 주거지역)
		학업성취	교육	양(교육연수) 질(학교의 명성)	대학(최소 2년제 이상) -
	문화	중산층 문화	-	-	
	주관적	귀속의식	계층의 단계구분		중 또는 중하

자료: 홍두승(2005)

또 다른 중산층의 정의는 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열망(aspir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열망으로 [표 2-4]와 같이 주택소유, 두 대의 자동차, 자녀의 대학교육, 의료보험, 휴가 그리고 은퇴자금을 꼽는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는데 이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³⁾.

영국 일간신문 ‘미러’(Mirror)의 2013년 기사에서는 2011년 1월에 조사한 “Great British Class Survey”의 결과를 인용하여 영국의 사회계층이 총 7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전통적인 사회계층이 경제적 지위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었다면, 이 조사는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모두 고려하여 사회계층을 구분하였다⁴⁾. 중산층은 두 번째로 높은 부와 사회적·문화적 자본이 모두 높은 안정된 중산층, 새롭게 등장한 집단으로 소규모이며 사회적·문화적 자본이 낮은 기술 중산층, 경제적 자본의 중간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문화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신흥 부유 노동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 2-4 미국 중산층들이 희망하는 생활수준

항목	내용
자가소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함. 자가 소유는 중산층의 기준이 됨
자동차 보유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거주지와 직장의 선택범위가 넓어지고, 원하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음
자녀들에 대학교육 제공	교육은 다음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중산층 가구들은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하기를 희망함
건강 보장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자신과 자녀들의 건강을 보장받기 원함.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건강보험 가입임
퇴직 후 보장	대부분의 중산층은 퇴직 후 금전적인 안정을 원함.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어느 수준 이상의 저축을 하는 것은 중산층이 되기 위한 조건임
가족여행	중산층은 충분한 휴식을 위해 가족여행을 하는 것도 필요

자료: 이은우·박동렬(2013) 참조

중산층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식은 중산층 개념을 통해 알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중심으로 보는 중산층의 개념은 한 사회 소득의 분배 상태를 알기 위하여 정의된 것이고, 지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특성을 중산층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소득 분배와 불평등 구조는 상호작용의 관계지만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소득 분배는 불평등 구조의 한 단면이면서 그 표현의 형태이지만, 계급과 지위는 사회적 구조의 특성을 보여주고 사회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결국 불평등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표 2-5 영국의 사회계층

구분	주요특징
엘리트(Eli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특권을 가진 집단 · 부(wealth)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점수가 가장 높은 수준
안정된 중산층 (Established Midd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로 높은 부유한 집단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점수가 모두 높음 · 가장 활발한 사교 집단이며 문화적 자본의 점수가 2번째로 높음
기술 중산층 (Technical Middle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이며,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집단 ·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점수가 낮음 ·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무관심에 의해 구분됨
신흥 부유 노동자 (New Affluent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본의 점수가 중간수준이며 사회적·문화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젊은 집단
전통적인 노동자 집단 (Traditional Working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본의 점수가 낮지만 완전히 박탈된 수준은 아님 · 구성원의 평균나이는 66세 이상이며, 높은 수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
신흥 서비스 노동자 (Emergent Service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고 젊은 도시집단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점수는 높은 수준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 (Precari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가난한 계층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 모두 박탈되어 있으며,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점수가 특히 낮음

자료: Mirror(2013.04.03) 참조

주 : * Precariat: 불안정한(preca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산층은 개념과 정의에서 사회 불평등 구조의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으로써 소득과 부, 사회적 기회, 사회적 위상과 생활양식, 그리고 가치지향 또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불평등 구조에서 중산층은 다양한 시각이 중첩되는 정체성을 가진다. 사회 불평등 구조의 시각에서 중산층의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중산층은 불평등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 위상에 편차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불평등 현상과 불평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갈등에서 세 가지 주요한 차원으로 계급, 계층, 세대를 제시한다.

중산층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앞서 보듯이 소득에 따른 서열화된 계층적 분포이다. 이는 소득과 수입에 따른 경제적 자원 배분의 특성에서 불평등 구조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실제 소득에 근거한 중산층의 접근방식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결과로 계층을 제시하지만,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결과는 다른 사회적 범주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사회학의 계급 분석적 시각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구성의 계급은 자본가계급, 중간계급, 노동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의 상호의존과 종속적 관계에서 사회적 표출의 형태로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전제하고,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기능적 특성으로 중간계급을 상정한다. 계급 분석적 시각은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점하는 위치로 계급을 제시하는데, 노동계급은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 그리고 농민층과 산업예비군으로서 실업층을 전제하고 있다. 중간계급은 19

세기에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자신의 노동과 제한된 자본으로 영위하는 자영업계층을 전제하였는데, 20세기에는 대규모 조직의 등장과 더불어 자본의 기능에 보조적이면서 사회계급 관계에서 중간적 위치에 있는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노동계층을 신중간계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급 분석적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 구성의 특성을 역사적 근거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실제 불평등 현실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적 특성에서 계급이 제시된다. 직업적 특성은 사회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직업과 관련된 수입과 사회적 위상에 따라 서열화된 특성을 보여준다. 자본소유를 전제하는 기업가, 경영자,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직업별 특성에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를 반영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반영하여 서열화된 직업적 불평등 구조를 상정한다.

계급, 직업적 구성, 계층의 관계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시각에서 서로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를 전제할 때는 소득 중심의 계층이 제시되는데, 소득의 원천인 직업과 이의 분포를 고려하면 위상차이가 드러난다. 사무직을 중심으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신중간계급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구중간계급은 소득계층에서 중간층이나 중산층으로 파악되고, 동시에 임금수준이 높은 생산직 노동의 노동계급도 소득분포상 중산층의 위상을 차지한다.

연구 과정에서 소득 중심의 계층은 가구단위를 전제로 하는 반면에 직업적 구성은 지위구조를 전제하는데, 이는 조사에서는 개인단위로 설정된다. 사회 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불평등 구조를 파악할 때 체계적

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직업적 특성에서 계급구조를 파악하는 계급 분석적 시각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계급구조에서 배제되는 특성이 있다.

불평등 사회구조에서 전 인구를 포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분석의 시각은 계급 간의 관계와 계급관계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중산층 연구에서 논리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구중간 계급과 신중간계급의 사회적 재생산과정에서 위치의 차이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산업구조와 사회적 변동에서 초래되는 계급 간의 위상과 갈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는 데 이러한 시각은 중요하다.

사회적 불평등은 계층의식 또는 계급의식으로 표출된다. 사회조사에 따라 중산층의식이나 중산층 귀속의식은 그 편차가 크데, 사회가 안정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전제될 때는 중산층의식이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는 반면에 정체된 사회에서 불평등 구조가 악화되면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소득의 상대적 분포보다는 계급적 위상과 계급관계에서 계층·계급의식이 나타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층의 특권의식이 사회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무리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산층 귀속의식은 축소되고, 서민의식이 중산층의식을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중산층 귀속의식은 소비 및 생활양식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생활수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중산층의 개념화에는 소득과 함께 계층의식이 함께 전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또 하나 고려할 범주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세대는 인구학적으로 특정한 연령층을 전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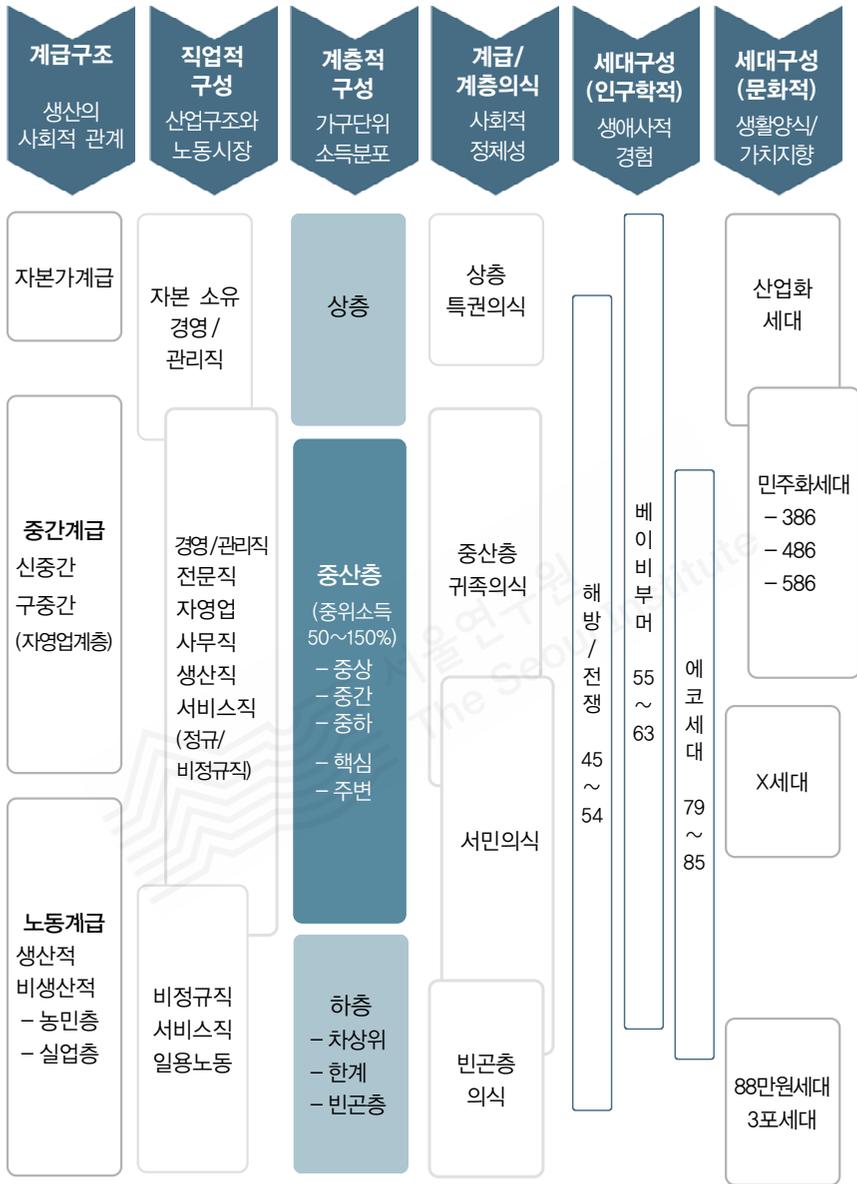


그림 2-2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접근

그러나 사회 내에서 모든 연령층 또는 세대가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특정한 시기에 공유하여 그에 따른 의식과 행위양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때 세대는 특정화된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경험과 인구학적 변천에서 특정화되는 세대는 해방과 전쟁 시기를 경험한 세대, 전쟁 이후에 인구팽창과 산업화과정에서 성장한 베이비붐세대,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생애사적 경험에 근거를 둔 세대구분이라면, 정치사회적 영향으로 특정화되는 일부 세력과 생활방식이나 가치지향으로 특정화되는 세대로 산업화세대, 386민주화세대, X세대가 있다. 그리고 최근 청년의 열악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88만원세대 또는 3포세대(N포세대)가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대논의는 각 세대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특정한 가치지향에서 이루어졌지만,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는 사회적 위상에 따른 세대 간의 자원 배분과 사회 기회구조의 특성에서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된다. 중산층 논의와의 관계에서는 산업화세대를 경험한 중산층의 의식과 이해가 사회 내의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 새롭게 사회 내에 진출하는 세대들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회적 갈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계층의식과 관련해서는 서민의의식이 중산층 의식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데 중간 소득계층의 아랫부분, 즉 중하 소득계층에서 자신을 서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 계급론적 관점에서 노동계급이 중간 소득층을 점유하면서 중산층 의식을 보일 수 있다. 1980년대에 서구나 일본의 역사에서 노동계급의 중간계급화 과정에 대

한 논의가 많았는데, 사회적으로 소득의 분포에서 불평등이 악화되면 중산층 사회의 신화가 부각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2-2]는 사회 불평등 구조의 위계적 특성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위상을 나타낸다. 소득 중심의 중간 소득계층,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간계급, 중산층 귀속의식의 관련성을 보고, 각각의 범주별로 위상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직업적 지위는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사회적 생산관계에서 계급적 특성을 부여한다. 소득 수준은 소비와 생활수준을 추정하는데 이것이 귀속의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중산층의 동향에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시각과 사회적 지위와 생산의 사회적 관계로서의 계급, 그리고 인구학적 세대구성의 특성이 사회적 범주를 넘나들며 중첩된다. 때로는 모호한 상황에서 한 사회 불평등구조의 특성과 이로 인한 갈등의 구조를 제시한다. 중산층의 동향은 바로 사회 불평등 구조의 동향이다.

1) 홍두승(2005), 홍두승·김병조(2006), 홍두승(2008)을 참조하여 정리함.

2) 중산층 논의의 접근방식을 카를 마르크스의 계급(class)으로 보는가, 막스 베버의 지위집단(status group)으로 보는가로 구분할 수 있음.

3) 한겨레 21, '중산층을 위한 미국은 없다' 제1084호(2015.11.2.), pp.49~51; "Middle Class in America", 2010.1 참조

4) Britain now divided into SEVEN classes not just upper, middle and working: Which are you?, 2013.4.3.(<http://www.mirror.co.uk/news/uk-news/>)

03

중산층 형성의 신화



중산층 형성의 신화

중산층 신화와 위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뤘으며, 그 성장의 과실인 높은 고용률과 소비생활수준의 향상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바로 ‘희망’을 의미하는 중산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집단으로 인식되었다(신광영, 2008).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수준을 배경으로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으로 주택 구입 등의 자산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수준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재의 안정된 삶을 토대로 미래에는 노후가 보장되고, 자녀세대로의 지위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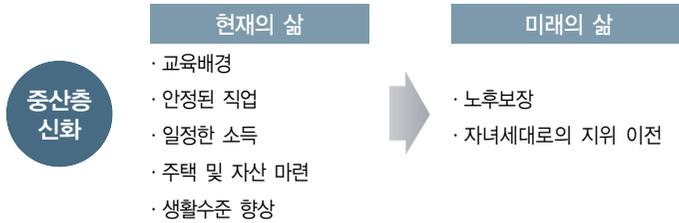


그림 3-1 중산층 신화

중산층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신화에서는 중산층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열(2006)은 중산층이 사회와 정치적 안정화에 기여하며,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갈등비용을 해소하고, 성장과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미래 삶의 안정성 회구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 성공적 삶의 표상이다. 중산층 신화는 현재 중산층의 삶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그리고 과거 산업화의 경험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중산층 형성이 신화가 되는 것은 그러한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뜻한다. 즉 중산층이 몰락하는 시기에 신화는 더욱 부각된다.

중산층의 몰락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윤자영(2014)은 중산층의 몰락이 개인의 노력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생애주기적인 삶의 과정을 더 이상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중산층의 몰락이 중산층 감소를 말하는데, 중산층 감소는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불안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강성진 외, 2010).

중산층에 개인적 삶의 불안정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불안은 연계되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한국의 중산층은 구조조정 및 고용 감소, 비정규직의 확산 등과 같은 급속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기침체 속에서 규모의 감소, 내적 분화 및 이질화를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신광영, 2003; 삼성경제연구소, 2006; 남은영, 2011).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저성장사회 기조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모두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동안 고용 및 경제생활의 안정을 누리왔던 중산층에 미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생활수준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인식에서 ‘중산층의 위기 담론’이 대두하였다.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 중산층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개인의 노력으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은 줄어들게 되었다. 과거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집단에 속했던 중산층들이 노동자 계급과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되었다. 중산층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보장된 계층이 아니라는 현실은 중산층뿐 아니라 비중산층에게도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게 하였다(신광영, 2008). 중산층 문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기회 상실뿐만 아니라 계층 하락이라는 상시적인 불안의 위기마저 내포하기 시작했다(윤자영 외, 2014).

이재열(2014)은 중산층의 위기를 성장의 사회적 한계¹⁾이론으로 설

명하기도 한다. 높은 사회적 지위는 제한된 자리만 가능하지만,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진다. 그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숙되고,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능케 했던 물질재의 확산에 뒤이어 중요해진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의 단계에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와 운영의 기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정된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은 대학진학, 취업시장, 주거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현재의 무한경쟁 구조는 점점 더 많은 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과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한겨레21〉과 신광영이 2000~2014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중간계급 세대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무사히 자녀세대로의 대물림이 성공한 경우는 10명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당시 안정적인 직업·학력·경제적 소득을 갖춘 만 30~59살 가구주였던 부모가 15년 뒤 자신의 계급을 유지한 비율은 53.4%, 부모와 자녀 모두 중간계급인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²⁾.

중산층의 불안은 바로 중산층 지위 유지의 어려움, 지위 이탈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한다. 또한 중산층 내부에서의 불평등과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이러한 불안은 중산층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중산층 문제를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의 사회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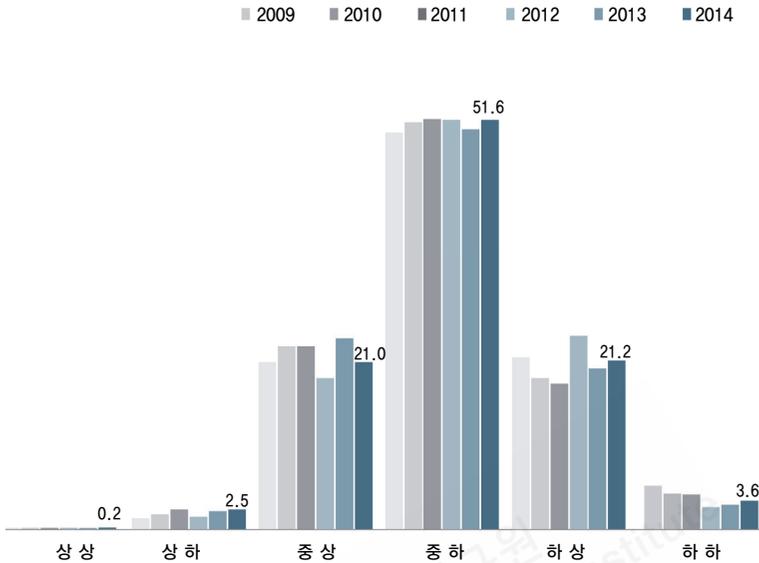
중산층 지위의 불안은 중산층 의식의 약화를 초래한다. 중산층 귀속 의식의 축소 현상은 중산층이 실제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산층 기준이 매우 비현실적으로 상승했음을 뜻한다.

2014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중산층 계층의식 변화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절반인 51.6%가 자신이 ‘중하’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0%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중상’층이라는 의식은 관리 전문직(37.9%)에서 특히 높았고, ‘중하’층이라는 의식은 화이트칼라(57.5%)에서 높았다.

서울서베이의 결과와 함께 다른 연구에서도 주관적 계층의식 또는 중산층 귀속의식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대체로 동일하다³⁾. 객관적으로 자산이나 소득에서 중간적 지위를 점하는 사람 중에 중산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비중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재열(2014)은 계층적 자신감 저하라고 지적하면서 “극도로 과장된 서민의 식의 확산”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객관적 생활조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격차가 더 크게 인식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중산층 의식의 소멸을 더욱 재촉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의식이 형성된다(이재열, 2014)⁴⁾.

중산층 의식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중산층 귀속의식이 사회 전체의 상대적 위상에 관한 의식이라면 이로 인해 사회 불평



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그림 3-2 서울시민의 중산층 귀속의식(%)

등 구조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의식은 사회의 공정성과 사회적 이동,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에 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소득과 부의 분배는 불평등해지고, 불평등한 기회와 제한적인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한다. 중산층 내부구성에서 나타나는 분화된 모습도 자원배분의 불평등 증가에 따른 계층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세대가 지닌 결과의 불평등은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불공평한 혜택의 원천이다”(앤서니 B. 오틀킨슨, 2015). 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부족, 보건 영양의 결핍, 충분치 못한 돌봄 등으로 연결되어 자녀세대도 빈곤의 덫에 빠질 수 있다. 불평등 수준의 심화는 그 구성원의 계층적 소속을 고착시키고 이를 통해 그 구성원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불평등의 덫’, ‘불평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금현섭, 2015).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⁵⁾를 보면, “한국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15.6%에 불과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태진 외, 2011).

오늘날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과거에 많은 한국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을 신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제 계층 상승의 통로가 되는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 즉 소득불평등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다시 자녀세대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준다. 세습되는 것은 학력뿐 아니라, 소득, 건강, 주거,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습은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김운태, 2015; 금현섭, 2015).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설문조사를 시행⁶⁾한 결과, 계층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에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주요결과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응답률이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5.8%p 상승하였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이 70.5%에서 80.9%로 10.4%p나 악화되었다. 이는 청년층의 실업률(8.0%→10.0%)과 비정규직 비중(29.7%→30.9%)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도 2013년 75.8%에서 2015년 86.2%로 10.4%p 악화되었다⁷⁾.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0.7%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주거비 부담(59.8%)과 교육비 부담(29.2%)을 꼽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 세대는 주거비 부담이, 4050 세대는 교육비 부담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이준협 외, 2015).

우리 사회는 특히 실업, 빈곤, 질병, 은퇴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불안감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층과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며 계층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택(2014)은 갈등이 구조화되면 계층의 고착화가 발생하여 사회적 유동성이 낮아지고 빈곤의 대물림으로 사회적 활력은 감소하며 사회갈등은 더욱 격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층갈등 의식은 2012년 「사회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의 계층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82%가 넘었다.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2011년에 비해 심하다는 응답(75.7%)은 증가한 반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5.7%)은 감소했다(강신욱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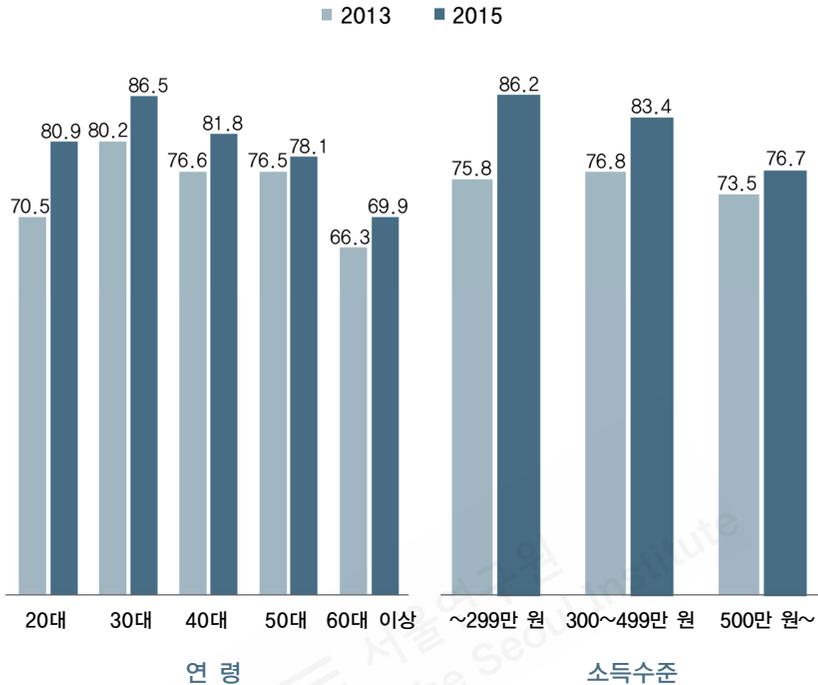


그림 3-3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

사회 계층과 관련된 의식은 사회 불평등 구조가 사회 구성원에게 반영된 것이다. 의식은 사회의 현실을 과장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층 소속감과 불평등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에서 중산층의 불안과 위기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중산층 귀속의식과 정치적 지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층의식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성향이 정치적 성향에도 반영된다. 정치적 성향은 가장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실제 역사적,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인 특성을 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의식과 같이 진보와 보수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계층의식이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날 때는 계층이 처한 현실에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다. 즉 계층의 정치적 의식은 계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문화일보는 세대별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세대와 계층,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2015년 11월 19일 기사로 보도되었다. 이 조사는 주관적 계층을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정치이념성향을 조사한 결과 보수라는 응답은 40대에서는 중산층, 50대와 60대는 상위층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중산층이라고 밝힌 40대의 42.8%가 보수라고 밝혔다. 50대와 60대에서는 상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73.4%와 73.5%가 보수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진보라는 응답은 40대에서는 서민층, 50대와 60대에서는 하위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⁸⁾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성향은 세대와 계층이 상호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세대별로 정리하면, 40대에서는 진보라고 답하는 사람이 주관적 계층으로 서민층, 중산층, 상위층에서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반면 50~60대에서는 보수라고 답하는 사람이 진보라고 답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은 주관적 계층보다 세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서 중산층, 상위층의 자산형성과 정치적 성향과의 관계를 전제할 수 있다. 자산의 기득권층이 기존 질서의 유지를 지향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보수화된다. 반면 인구 연령적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될수록 기존 질서의 익숙함이 보수화의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분포에서 볼 때 기성세대의 보수화는 자산형성과 함께 기득권을 갖고, 기존 질서의 유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1) 프레드 허쉬(Fred Hirsch)는 경제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재(material good)의 공급이 가져다주는 밀물효과를 상실하게 되고, 지위재(positional good)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장에는 사회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봄(이재열, 2014).
 - 2) 한겨레21, 2015.9.23.~2015.11.2., '모래시계 중산층';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2000~2014년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해 〈한겨레21〉을 통해 결과 보도
 - 3) 통계청이 2015년 11월26일에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의 계층의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중간층이 53.0%, 상층이 2.4%, 하층이 44.6%로 나타남.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상(17.9%)보다 중하(35.1%)의 비율이 더 높음.
 - 4) 이재열은 경제적 성취가 모든 사람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대부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하게 되는 '풍요의 역설'(Fred Hirsch)로 설명하고 있음.
 - 5) 전국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 6)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설문조사를 시행해,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7) 이준협 외, 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안과 과제」, 15(29), 현대경제연구원
 - 8) 문화일보, 2015.11.19., "'난 중산층' 사람 중에...-'보수 지지' 40대 42.8% < 50대 58.6% < 60대 73.1%' ; 문화일보 '40·50·60 세대별 정치의식'(10월 29일 공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심층분석한 결과 보도

04

중산층 분화와 불안



중산층 분화와 불안

중산층 계층 분화의 추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추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득 양극화¹⁾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였는지, 이 때문에 소득계층이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양극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정우·이성립(2001)은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중산층 비율을 추정하여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계층이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됨으로써 중산층이 줄어들었음을 검증하였다. 민승규 외(2006)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보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를 통해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은 5.3% 감소했지만,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하여 중산층의 감소가 하위층의 증가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남준우(2007)는 한국노동연구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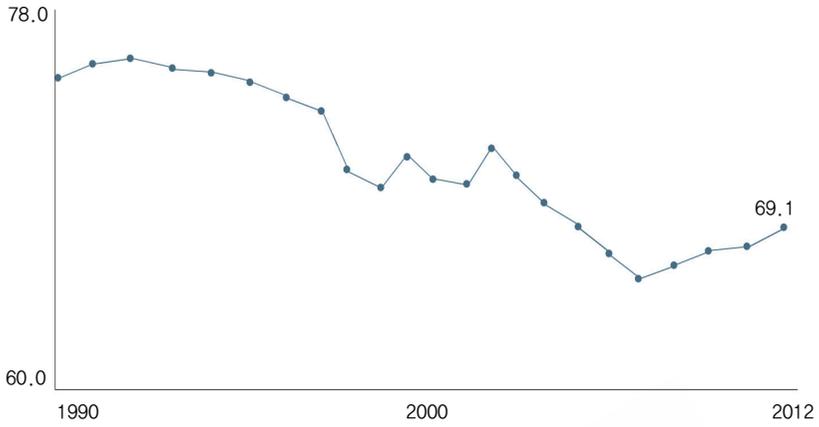
층 비중이 1999년 42.3%에서 2004년 40.7%로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 가운데 하위층으로의 이동 비중이 더 큰 사실을 발견하였다.

통계청도 최근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중위소득계층이라고 정의하고,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서 사용하는 전체 가구 기준 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 중 도시 2인 이상 가구 자료를 사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을 추정해 발표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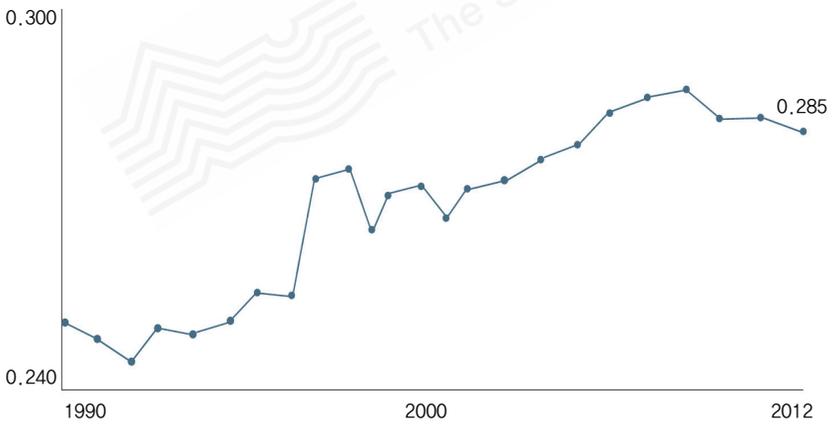
특히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계층에 포함되는 비율은 1990년 75.4%에서 199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68.9%까지 감소하였다. 2000년 71.7%, 2003년 71.8%로 잠시 증가했던 중위소득계층 비율은 2004년부터 다시 감소추이를 보여 2008년 66.3%로 줄어들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9.6%보다 더 낮은 수치이며, 2007년부터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 추이도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97년(0.257), 1998년(0.285)의 급상승 현상과 2009년(0.295)까지의 상승 현상은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소현 외, 2013). 중위소득계층의 비중과 지니계수의 추이에서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OECD가 발표한 자료³⁾에 따르면 2010년 가구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0.31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와 중부 유럽 국가들(덴마크 0.25, 스웨덴 0.27, 독일 0.29, 프랑스 0.30)에 비해서는 불평등성이 높았지만, 미국(0.38), 영국(0.34), 일본(0.34)에 비해서는 불평등성이 낮았다.



중위소득계층 비율(%)



지니계수

자료: 박소현 외(2013)

그림 4-1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계층 인구비율과 지니계수 추이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경기 침체 및 성장률 저하로 소득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위기, 중산층의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⁴⁾를 이용해 최근의 중산층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⁵⁾는 2012년에 구축한 패널조사로 매년 동일한 조사대상 가구를 추적하여 조사한다는 이점이 있다. 연구진은 2012~2014년 수도권 1인 이상 일반가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서울의 중산층의 모습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은 앞서 검토한 일반적인 OECD 정의(1995)를 토대로,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구원 수를 반영한 균등화가처분소득⁶⁾ 기준 중위소득 50~150% 미만인 중위소득계층으로 규정된다. 중산층은 다시 중위소득 50~75%를 중하위소득계층, 중위소득 75~125%를 중-중위소득계층, 중위소득 125~150%를 중상위소득계층으로 세분화한다.

표 4-1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계층 분류

구분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
	중위소득 50%~150%
중산층	중하위계층: 중위소득 50%~75%
	중-중위계층: 중위소득 75%~125%
	중상위계층: 중위소득 125%~150%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2014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의 평균소득은 2,558.6만 원이고, 중위소득은 2,145.4만 원이다. 즉 가구원당 처리가 능소득이 1,072.7만 원에서 3,218만 원인 집단이 중산층에 포함된다. 2014년 중산층의 비중은 54.9%로 전년보다 0.4%p 상승하였으나, 최근 3년간 중산층 규모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계층 내에서는 변화 양상이 보인다. [그림 4-2]와 같이 중위 소득 50~150% 집단을 10% 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중상위층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중위소득 60~90%인 구간인 중하위층에서 특히 점유율 요동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하위계층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중하위계층의 위상은 가장 취약하다.

표 4-2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계층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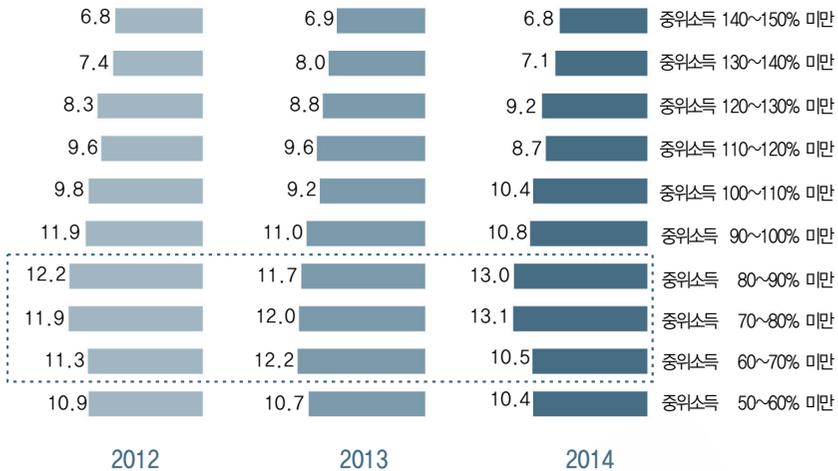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2012	2013	2014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미만	18.3	18.6	18.3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54.6	54.5	54.9
		50%~75%	15.1	15.4	14.9
		75%~125%	29.3	28.6	29.5
		125%~150%	10.2	10.4	10.4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 이상	27.1	26.8	26.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위소득값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1995.0만 원
- 2013년: 2084.9만 원
- 2014년: 2145.4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4-2 소득수준에 따른 중산층 내 분포 추이(%)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사회의 흐름 속에서 중산층은 내적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신광영(2003)은 중산층 내부의 이질성 심화에 주목했다. 실업률 증가와 고용불안 심화, 임금하락 등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소득계층으로의 점진적인 이동을 불러오며, 더 나아가서는 저소득층으로의 하락을 초래한다. 하위중산층은 저소득층과 다름없는 경제적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구진은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소득계층별 재정규모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의 일반적인 재정 구성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중산층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3,905만 원이고 가처분소득은 3,200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중산층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8,273만원, 실물자산은 21,875만 원이고, 평균 순자산액은 23,86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

채는 평균 6,288만 원이며 이 중 금융부채는 4,066만 원, 임대보증금은 2,221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가구의 평균 소득금액은 2012년 2,942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8.8% 증가하였다. 반면 저소득층의 2012년 대비 2014년 평균 소득금액의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중산층 내의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75%인 중하위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금액은 2,013만 원으로 중위소득 125~150%인 중상위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금액인 4,669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하위소득 계층의 순자산액 18,037만 원과 중상위소득 계층의 순자산액 32,823만 원 역시 약 두 배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산층 내에서도 소득이나 자산규모의 차이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3 2014년 소득계층별 재정규모

(단위: 만 원(평균))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	순 자산액	경상 소득	가처분 소득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채 총액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저소득층	11,794.3	1,039.5	859.0	3,567.5	10,932.9	2,706.0	1,703.3	1,002.7
중산층	23,860.8	3,905.2	3,200.0	8,273.0	21,875.9	6,288.1	4,066.2	2,221.9
- 중위소득 50~75%	18,037.7	2,463.6	2,013.3	5,439.0	17,554.5	4,955.8	3,156.5	1,799.3
- 중위소득 75~125%	23,646.2	3,998.5	3,282.2	8,281.0	21,646.9	6,281.7	4,310.4	1,971.3
- 중위소득 125~150%	32,823.0	5,708.6	4,669.4	12,315.8	28,724.4	8,217.3	4,678.2	3,539.1
고소득층	64,398.5	9,825.4	7,861.0	21,056.2	58,510.9	15,168.6	9,303.6	5,865.0
합계	32,526.5	4,969.0	4,022.0	10,841.0	29,700.3	8,014.8	5,038.8	2,976.0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 중산층의 대표가구는 자기주택을 소유한 40대의 대졸 정규직근로자 남성 가구주를 보유한 가구이다.

다음과 같이 중산층 내에서도 연령이나 교육수준, 직업(종사상 지위), 입주형태에 따른 계층 분화 양상이 보인다.

중산층 가구주 성별은 남자가 80.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 수치는 고소득층의 90.6%보다 다소 낮았으나 저소득층의 53.9%에 비해 매우 높았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가구에서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높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비중이 53.4%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반면 중산층은 40대(31.0%), 50대(24.7%)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산층 내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30~40대의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졸업 이상인 가구주의 비중이 저소득층은 13.6%에 불과한 데 비해 중산층은 42.2%, 고소득층은 67.5%로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은 점차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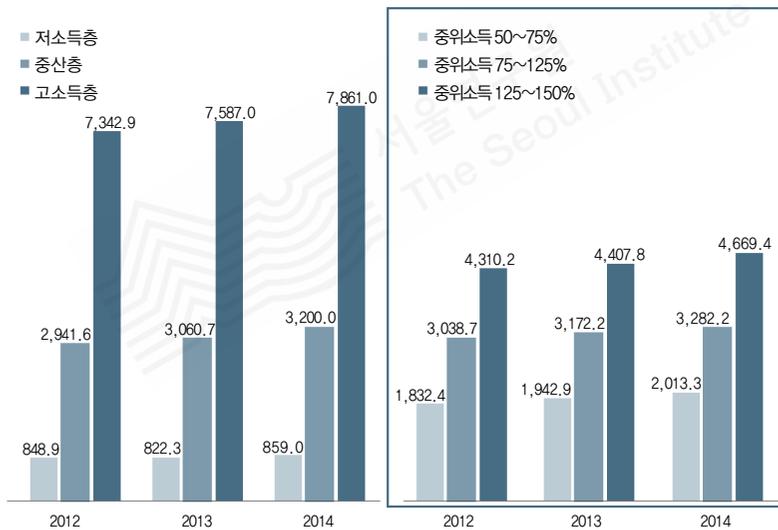
취업의 특성을 보면, 중산층 가구주는 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이 51.4%에 달하는 데 비해 저소득층은 임시일용근로자가 24.2%로 높았으며 무직자의 비중이 50.6%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중산층에서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중위소득

75~125%의 가구집단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18.1%에 달하고 있다.

주거의 계층별 특성을 보면 중산층은 자가주택 소유 비율이 48.1%이지만, 전세비율은 30.1%이다. 반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27% 수준에서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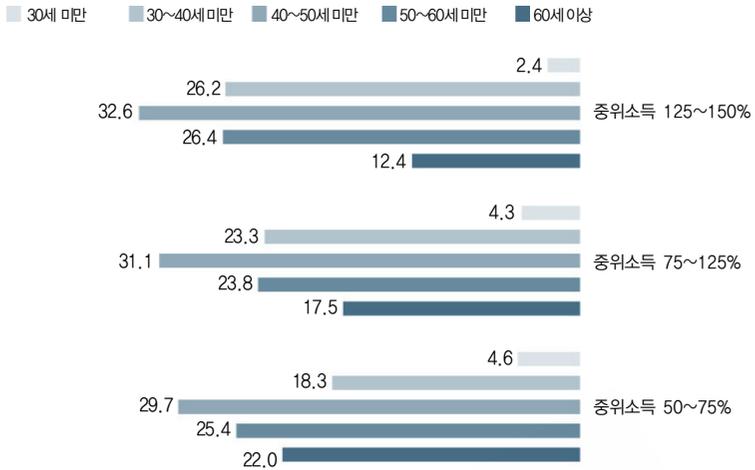
단 저소득층 가구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29.8%로 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 내에서도 상위소득계층일수록 자기 집과 전세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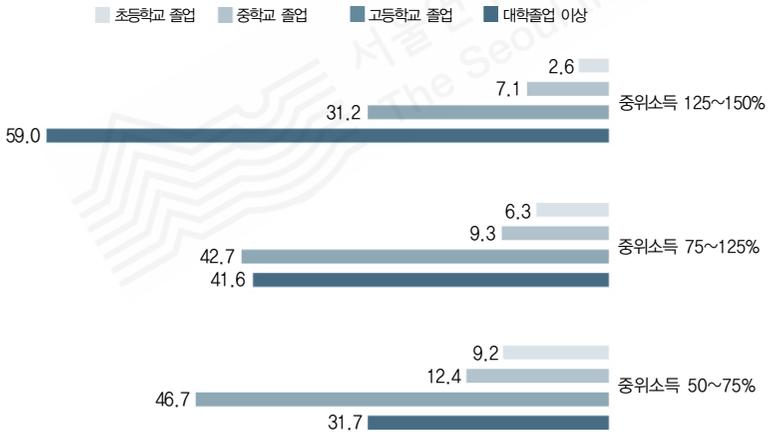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가처분소득 기준

그림 4-3 중산층의 평균 소득 추이(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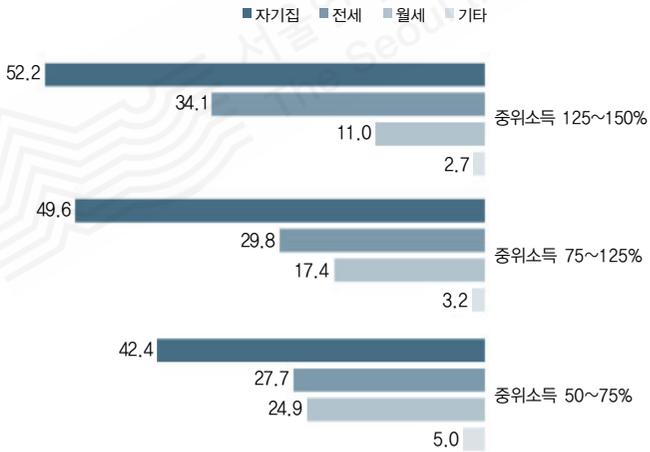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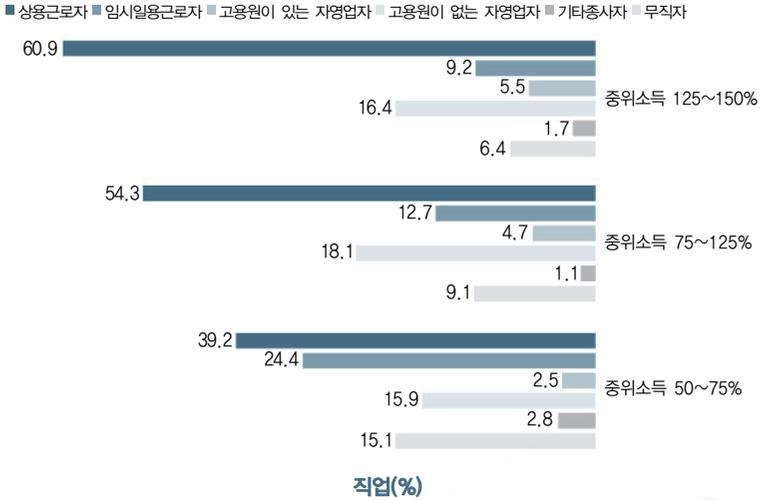
연령(%)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교육수준(%)

그림 4-4 중산층 내 가구주 연령 및 교육수준 분포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입주형태(%)

그림 4-5 중산층 내 가구주 직업 및 입주형태 분포

생애주기적 불안과 세대 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그 구성에서 내적으로 동질적이라기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의 범위를 넓게 설정한 이유도 있지만 중산층의 분화과정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중산층이라도 연령이나 교육수준, 직업, 자가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대 간 의식격차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격차가 때로는 계층 간 격차를 압도하고 있으며 이를 희석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중산층 위기문제는 세대 문제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신광영(2015)은 중산층 위기를 분석하기 위해 생애주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의 삶은 생애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계층으로 진입하거나 유지하며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의 변화단계에서 개인은 가족의 사회 환경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20~30대 젊은 '니트족'은 2003년 91만 명에서 2012년 2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치솟는 전세금으로 30대는 살 곳이 없고, 생활과 자식의 교육에 돈이 계속 새는 40대는 노후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간다.

이 기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세대가 겪는 경험의 차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로, “20대는 취업, 30대는 주거, 40대는 노후가 불안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사회에서 사실상 중산층 가구에는 짧아진 근속연수와 낮아진 임금으로 인한 부모세대의 어려움

과 고학력자이지만 안정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기 어려운 자녀세대의 문제가 혼재한다. 청년세대는 중산층 진입 기회가 아예 박탈되거나, 노후세대는 중산층의 이탈이 발생한다. 한 편에서는 일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 중산층 가구의 위기의식과 불안은 계층의 이탈뿐만 아니라 계층 내부에서의 불평등과 갈등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중산층의 변화에서 주목받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과 상호의존관계이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세대가 베이비붐세대와 그들의 자식 세대인 에코세대이다. 이들은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연령상의 차이에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중산층 형성과정의 세대경험을 반영한다.

이재열(2008)은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간 세대경험의 차이는 한정된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베이비붐세대는 빠른 고도성장 사회에서 대학만 나오면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코세대는 경제난 속에서 대학졸업자가 쏟아졌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고학력의 청년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은 대학진학, 취업시장, 주거 등을 놓고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구성하는 주력으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베이비붐세대의 불안은 퇴직 등을 겪을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노년기 지위유지 어려움에 따른 자신의 중산층 이탈과 자녀세대의 지위하락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중산층의 생활 부담에 대해 금현섭(2015)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이

주거비용과 자녀의 교육비 등 삶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느라 사실상 저축이 힘든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법정퇴직급여제도 역시 포괄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급여가 소득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제도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의 불평등과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중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노후보장체계에 서도 이중화가 증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노년기 불평등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 연금이 아직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베이비붐세대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24%에 달하는 462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직과 사업 중단, 생활 곤란이 그 이유이다. 납부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으면 연금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고용, 임금이 불안정한 이들은 수급망 바깥으로 밀리기 쉽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신광영(2015)은 노인이 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 복지제도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현재의 노동시장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미루어봤을 때 다수의 중산층이 노후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세대는 경쟁적 사회구조에서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고용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의 등장까지 불러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결혼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84%),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77%)⁸⁾ 등이 꼽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젊은이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가치관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 실정이다(조권중, 2015).

막상 취업하고 결혼을 해도 내 집 장만은 어렵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주거비용은 청년층이 독립적인 사회 개체로 나서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 자녀세대의 주거비 부담은 부모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박덕배, 2012). 에코세대는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주거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사회진입기’를 보내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은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노오오오력⁹⁾해도 안 되는 사회”라고 스스로 낙인찍어 버린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사회진입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다. 사회진입에 실패한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부모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대 간 중산층 재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재 부모세대가 중산층일지라도 중산층의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된다.

중산층 내에서 세대적 특징은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의존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두고 제기되는 세대 간의 갈등은 이중노동시장 현상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기존의 일자리 기득권을 가진 세대는 고임금, 정규직으로 울타리를 치고, 젊은 세대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불만은 기존 세대의 기득권에 향해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에 더 많은 지출과 자격을 가진 젊은 세

표 4-4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특성	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에코세대 (1979~1992년생)
인구규모	695만 명	954만 명
주된 연령	50세(87만 명)	29세(81만 명)
주된 거주 지역	경기 157만 명 거주	서울 223만 명 거주
주된 교육정도	고등학교 44.7%	대학교(4년제) 45.5%
주된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83.5%	미혼 82.4%
기혼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24.0세	25.3세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	2.04명	1.10명
주된 직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0%
주된 산업	제조업 18.2%	제조업 19.4%
주된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58.8%	임금근로자 89.9%
1인 가구	58만 가구	100만 가구
주된 세대구성	2세대 가구 65.3%	2세대 가구 65.7%
주된 가구분포	경기 115만 가구	서울 150만 가구
주된 점유형태	자기 집 59.6%	보증금 있는 월세 42.5%
주된 거처의 종류	아파트 52.3%	단독주택 49.6%
주된 거주층	지상층 96.6%	지상층 94.9%
사회활동 참여율	41.1%	24.6%

자료: 통계청,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주 :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규모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 기준(베이비부머 695만 명)으로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장래인구추계는 2010년 7월 1일 기준(베이비부머 714만 명)으로 외국인과 조사누락 보정분이 포함되어 19만 명 정도 차이가 있음.

대가 양질의 일자리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과 장년층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진다. 한 가정 내에서 청년은 장년층의 자녀로 부양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청년층이 안정되고 적절한 임금수준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장년층의 노후 지위와 생활수준 기대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가족을 넘어 사회안전망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체계는 세대 간의 자원 이전을 전제하고 있다. 청년세대가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는 안정된 일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자원이 확보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립된 연금기금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는 이러한 상호의존과 갈등관계에 처해있다.

-
- 1) 소득 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함(민승규 외, 2006).
 - 2) 박소현·안영민·정규승, 2013,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 -소득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 3)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4) 가계금융조사(2010년~2011년)에 복지부문을 추가해 2012년에 1차 패널가구를 구축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시행함. 2014년은 패널 3차연도로 패널유지율은 88.3%임(17,863가구).
 - 5) 모집단: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전수+표본)/표본추출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표본규모: 전국 약 20,000가구(금융부문 1만 가구, 복지부문 1만 가구)
 - 6)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지출)을 가구원 수로 나눈 소득(공적 이전소득: 공적 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공적 지출: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
 - 7) 연합뉴스, 2015.10.08., “20대는 취업, 30대는 주거, 40대는 노후가 불안하다”
 - 8) 김승권·최영준, 2014,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64세 전국 1만 8,000가구의 기혼 남녀 1만 515명 대상 조사(복수응답)
 - 9)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부의 대물림을 비유한 금수저, 은수저 논란과 더불어 일명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부정적 의미에서 노력을 비꼬는 표현임.

05

중산층 지위 형성과 재생산



중산층 지위 형성과 재생산

중산층 형성 과정

중산층에게 삶의 기회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 착실하게 돈을 벌어 저축하여 집도 사고 재산도 불려 안정적인 노후까지 보내는 일련의 과정에 걸쳐 있다.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의 삶을 더 이상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음을 뜻한다. 안정된 삶으로 진입하는 기회에서 배제되고 그 안정된 삶에서 이탈되고 하락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게 불안이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윤자영 외(2014)는 한 개인이나 가족이 중산층이라는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안주하거나 수직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고용-소득-자산’이라는 중산층의 형성과 지위재생산의 기제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력자본, 안정적 일자리, 저축이 가능한 소득, 주택구입 등의 자산 축적은 바로 중산층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지표들로, 이

러한 수단들로 인해 중산층에 진입하고, 살아남으며(세대 내 재생산), 자녀에게도 이전해줄 수 있다(세대 간 재생산).

중산층이라는 사회적·경제적 지위¹⁾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은 사회이동을 수반한다는 의미다. 이 기제가 불안정하면 각 단계에서 기회불평등, 자원독점으로 인한 외부 배제 등이 발생하고, 이는 곧 계층상승 이동기회의 제약이나 계층하강 이동출구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면 가능했던 중산층 진입과 꾸준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상징하는 중산층 진입과 수직 이동 기회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가 될 것이다.

이재열(2006)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사회와 ‘열린 지위’를 이야기하나, 현실은 늘 ‘닫힌 지위’를 차지한 자와 여기서 배제된 자들 간의 불평등으로 가득한 사회라고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으로 형성되는 학력자본, 스펙전쟁인 취업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등이 중산층 진입과 수직 상승 이동 기회에 진입장벽을 두텁게 치며 ‘닫힌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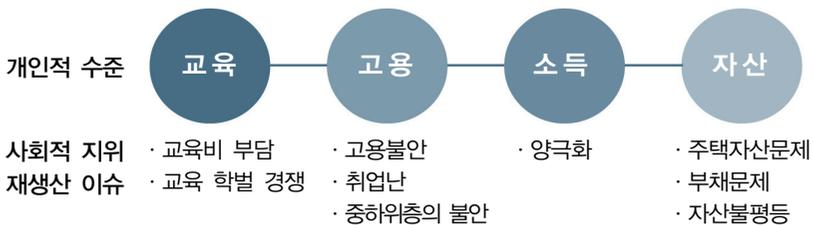


그림 5-1 중산층의 형성과 지위재생산의 메커니즘

앞 장에서 논의했던 중산층의 감소와 내부분화가 양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확대와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이번 장에서는 중산층이라는 지위를 형성하고 유지, 재생산했던 수단들이 계층이동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게 된 현상들을 다루고자 한다.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은 경제적 기회의 감소를 가져오고 사회이동을 통제하며 그만큼 다른 형태의 불균형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바로 오늘날 계층 불안을 야기하는 근원이다.

지위재생산의 문제

교육기회의 불평등 중산층에게 교육은 세대 내 재생산의 기제이며 세대 간 재생산의 기제로 작동한다. 본인 세대의 교육 효과를 인식한 세대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다.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와서 피해봤다”는 울음을 보기 싫다. 내 자식을 상류층으로 만들기 위해선 특목고는 기본이다. 요즘 생기고 있는 ‘초호화 초등학교’부터 보내야 된다. 1달 100만 원의 등록금, 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따라가야 한다. 황새가 뱀새 따라 하다 가량이 찢어지는 고통이다²⁾.

이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를 특목고로 보내겠다는 중산층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은 중산층 진입을 위한 발판이자, 계층이동의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을 매개로 사회적 지위를 이미 확보한

계층은 세대 간 유지, 그렇지 못한 층은 상위 계층으로 진입을 시도한다. 홍두승(2005)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소위 ‘학벌’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맥과 집단소속감 등에 따른 사회적 지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수단의 의미를 벗어나 그 자체가 목표라고 강조한다.

특목고나 해외유학 같은 특정한 경로의 기회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리 더 나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같은 기회를 부여 받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친분을 쌓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회의 차이는 사회 내 다른 집단을 배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막중한 사교육비 부담 속에서도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 투자를 하게 된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악화와 고용불안정을 경험한 중산층은 대중교육 확산과 고학력화에도 더 이상 대학졸업장이 중산층 진입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지위 유지에 불안한 중산층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수단으로 교육에 더욱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장미혜, 2008).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는 구조적 원인은 사회 양극화에 있다. 소득의 차이는 사교육비의 차이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소득별 학업 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김호기(2012)는 사회양극화가 교육격차로 나타나고 이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교육격차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 8천 원, 참여율은 83.5%로 분석되었으며,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만 6천 원, 참여율은 32.4%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서울이 33만 5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참여율 또한 서울이 74.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소도시, 광역도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통계청(2015)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전체의 7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보통 21.0%, 부담스럽지 않다 6.0% 순이었다. 부담스럽다는 인식은 여성(72.3%), 50~59세(73.4%), 중졸(74.1%), 서비스판매업 종사자(72.1%)에서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 수록, 주관적 만족도에 불만족하는 집단(81.0%)일수록 교육비 부담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1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참여율

(단위: 만 원 %)

구분	사교육비		참여율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전체	23.9	24.2	68.8	68.6
100만 원 미만	6.8	6.6	31.3	32.1
100~200만 원 미만	11.1	10.2	45.3	43.1
200~300만 원 미만	16.0	15.9	60.1	60.1
300~400만 원 미만	22.1	21.2	71.5	69.8
400~500만 원 미만	28.0	27.2	79.2	77.5
500~600만 원 미만	33.0	31.9	82.5	79.7
600~700만 원 미만	35.9	36.7	84.8	84.3
700만 원 이상	41.5	42.8	83.5	83.5

자료: 통계청, 2015, 「2014년 사교육비 조사」

표 5-2 권역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 원 %)

구분	사교육비		참여율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전체	23.9	24.2	68.8	68.6
서울	32.8	33.5	75.0	74.4
광역시	23.3	23.1	68.9	67.8
중소도시	23.8	24.1	70.2	70.1
읍면지역	14.7	15.6	57.5	59.2

자료: 통계청, 2015, 「2014년 사교육비 조사」

중산층은 가계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계층이다. 지나친 사교육비 비중은 중산층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김용기 외, 2010). 그러나 대학졸업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취업난으로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얻지 못하고 노동자계급 직종으로 취업하거나 그마저도 얻지 못해 백수로 전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중산층까지 확산된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중산층도 교육을 다른 계층의 진입을 막는 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위재생산 과정에서 교육은 사회이동의 수단과 통로를 제시하지만 저성장체제에서 기회가 닫히게 되면 교육은 사회경제적 격차와 함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교육비는 지위경쟁 때문에 부담이 더 증가한다. 그리고 교육영역에서는 선발 위주의 입시경쟁과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공교육에 대한 학원산업의 확장

으로 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중산층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공교육의 문제와 사교육 산업의 팽창 속에서 교육비 지출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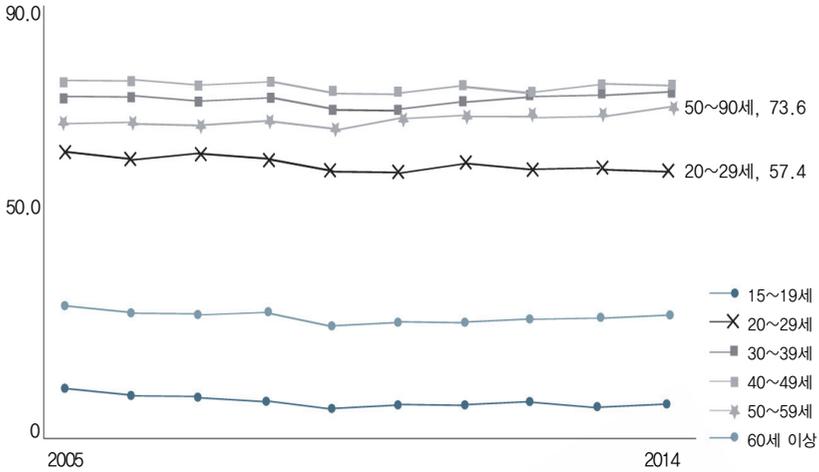
고용시장의 불안 경제위기 이후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용불안감의 심화, 임금하락 등은 중산층의 근간인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불안은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상당수의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중산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무직 중간관리층이 이러한 변화의 주 대상이 되었으므로 중산층이 받은 타격은 매우 크다.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높은 실업률, 노동수요의 감소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직, 파산에 대한 위기감의 심화는 중산층 의식을 약화시키며, 중산층의 내적 분화와 계층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노동시장의 감소와 취업난 등으로 현재 고용률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서울의 2005년과 2014년의 연령대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15~29세의 저연령층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특히 20~29세의 고용률(57.4%)은 2005년보다 6.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59세의 고용률(73.6%)은 7.0%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2 서울의 연령대별 고용률

장년층의 고용률이 증가한 이유는 노후준비가 쉽지 않은 장년층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OECD 2015년 2분기 회원국 고용률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55~64세 장년층 고용률은 65.5%로 OECD 평균(58%)은 물론, 주요 7개국(G7) 평균(61.3%)을 웃돌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9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남성 장년층 고용률은 78.8%로 OECD 평균(66.8%)을 10%p 넘게 웃돌아 34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인 6위에 올랐다. 여성 장년층 고용률도 52.5%로 OECD 평균(49.8%)보다 높아 34개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이들 장년층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은 편이다. OECD 고용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층 피고용자의 49.5%는 시간제나 임시직 노동자였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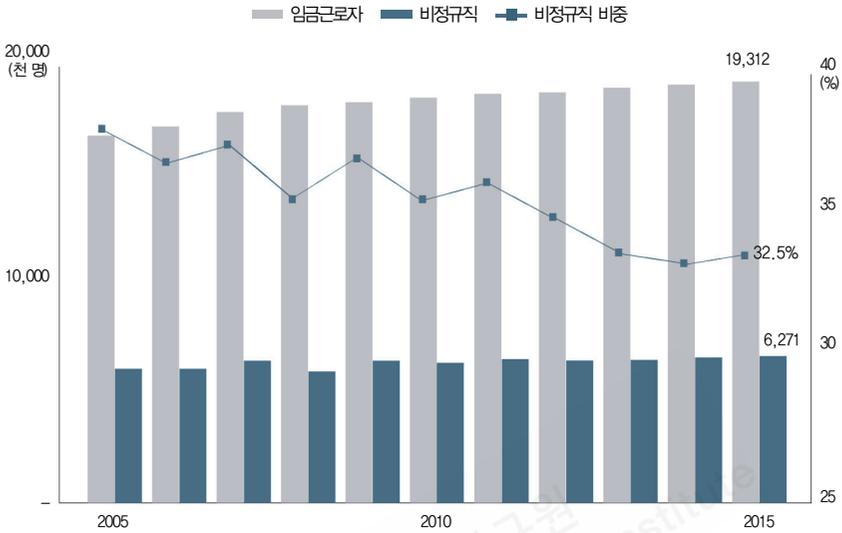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전년에 비해 0.5%p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공식통계로 나타난 실업률보다 실질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특성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4천 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p 상승하였다. 근로형태별로는 시간제, 연령별로는 60대,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활용이나 아웃소싱 확대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직에서 중간 지위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업 내 인력구조는 핵심근로자와 주변근로자로 양극화되는 이중구조를 띠게 되었다. 기업들이 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게 되면서 상용직 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는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해오며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안정성을 더 이상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중간임금계층 내에서도 전문직과 기술직은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전문고급인력과 저임금 근로자로 분화되었다.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임금계층 내에서도 소득이 낮은 중산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신광영, 201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그림 5-3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노동시장의 구조적 압박은 사회안전망의 취약성 때문에 중산층의 계층불안정을 증가시킨다. 경향신문의 특별 보고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진입도 못한 중산층들이 사회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꼬집고 있다.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으로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제도적으로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은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40.5%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중산층에서의 이탈을 초래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소득의 양극화 고용체계 변화로 중산층 내 소득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급증으로 소득편차는 커지고 있다. 홍두승(2005)은 임금의존성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임금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계층은 임금감소 등으로 전체 수입이 감소한 반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고소득 계층은 주택가격 및 이자소득의 증가 등으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광영(2015)은 한국의 중산층 위기가 무엇보다도 장년층이 중산층의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녀도 안정된, 즉 두 세대에 걸쳐 안정성을 확보한 중산층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이 연결고리에 교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2014년 지니계수(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02로 2010년 대비 0.0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며 2014년 14.4%로 2010년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여성(16.4%)이 남성(12.1%)에 비해 높았고, 은퇴연령인구(48.8%)의 상대적 빈곤율은 근로연령인구(9.3%)보다 5배 이상 높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OECD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소득의 7배였지만 2013년에는 9.6배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미국도 소득격차가 2007년 15.1배였으나 2014년에는 18.8배로 늘어났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10.1배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인 12.6%를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⁴⁾.

한국은 연도별 소득 양극화 지수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이 11.2%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14.6%로 높았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또한 OECD 평균이 9.6%인 반면, 대한민국은 10.1%(2013년)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 기준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2이며 대한민국은 0.30으로 OECD 평균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2006년 52.3%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2014년 62.5%로 10.2%p 증가하였으며,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37만 9천 명(30.6%)으로 사상 처음으로 30%선을 돌파했다⁵⁾.

자산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심하며, 자산 중에서도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두드러진다. 남상호(2015)는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소득 및 자산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유추해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84, 가구기준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6으로 나타났다⁶⁾. 이에 비해 총자산은 0.584로 높았으며, 특히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661로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4]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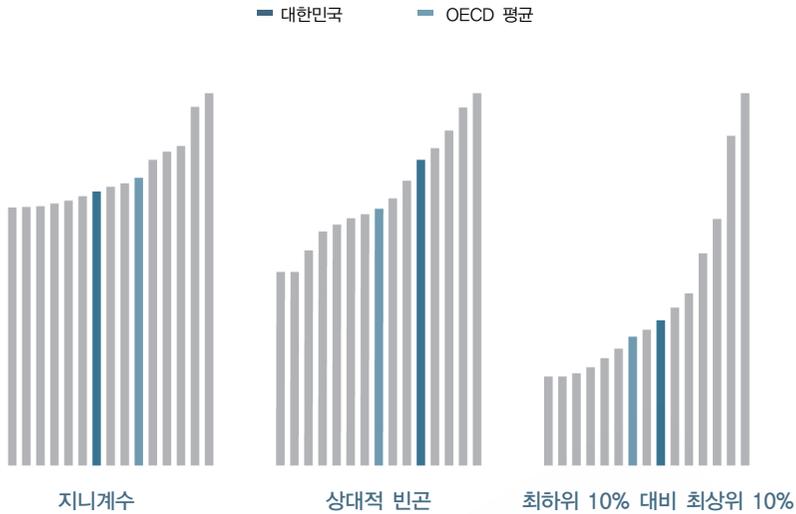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2006	0,306	14,3
2007	0,312	14,8
2008	0,314	15,2
2009	0,314	15,3
2010	0,310	14,9
2011	0,311	15,2
2012	0,307	14,6
2013	0,302	14,6
2014	0,302	14,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자료: OECD, 국가별 소득 분배 및 빈곤(<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그림 5-4 연도별 소득 양극화 추이



자료: OECD, 국가별 소득 분배 및 빈곤(<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그림 5-5 국가별 소득 양극화 비교

2014년 「가계복지·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150% 기준의 중산층 평균 자산총액은 30,149만 원으로 저소득층(14,5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고, 고소득층(79,567만 원)의 1/3 수준이다. 중산층은 부동산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총 자산에서 72.3%에 달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실물자산의 비중은 높아졌고, 금융자산은 낮아졌다.

2014년 기준 수도권외의 중산층 가구 중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71.6%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21%로, 저소득층(18.7%), 고소득층(19.1%)에 비해 부채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부채는 크게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산

층은 특히 금융부채의 비중이 64.7%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표 5-5 가계소득 및 자산의 지니계수

균등화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0.384	0.426	0.584	0.619	0.661

자료: 남상호(2015) ;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각 변수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이며, 총가구 수는 17,863임.

표 5-6 소득계층별 자산 현황

(단위: 만 원)

균등화가 처분소득 기준	순자산액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저소득층	11794.3	14500.3	3567.5	10932.9	2706.0	1703.3	1002.7
중산층	23860.8	30148.9	8273.0	21875.9	6288.1	4066.2	2221.9
고소득층	64398.5	79567.1	21056.2	58510.9	15168.6	9303.6	5865.0
합계	32526.5	40541.3	10841.0	29700.3	8014.8	5038.8	2976.0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수도권 대상 총가구 수는 6,206임.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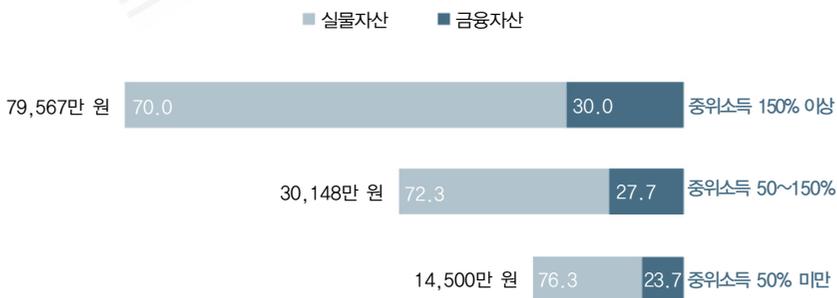


그림 5-6 소득계층별 자산 분포(%)

흔히들 “돈이 돈을 버는 사회”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자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 간다는 점에서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상호(2015)는 상위 10%의 집단이 우리나라 가구 전체 자산의 43.7%를 보유하는 반면, 하위 40%는 전체 자산의 5.9%를 보유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소득의 불균형보다 자산의 불균형이 불평등 심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발점’부터 차이가 벌어져 있다는 데 있다⁷⁾.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토지와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집단과 소유하지 못한 집단 사이에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쉬운 사회에서는 근로소득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과 주식, 은행저축 등의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불평등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며 결국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한다.

저성장체제의 불평등 구조

중산층 형성 기제의 문제는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를 뜻한다.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는 저성장체제에서 초래되는 사회구조의 경향에 원인이 있다.

중산층 신화는 중산층 형성의 기제가 지배적일 때 만들어졌다. 교육을 통해 안정된 직업을 갖고, 높은 임금 수준에서 충분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과 기대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고성장 체제에서 양립이 가능하다. 급속한 산업화시대에서는 인력 부족이 만연한데, 일정한 자격을 전제하는 학력 자본을 갖춘 사람들은 쉽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경제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직업적 지위의 상

승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고급 인력의 공급 부족은 기업의 인력 수급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임금수준을 누릴 수 있게 했고 이에 따라 저축과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이 가능한 구조였다. 더불어 부동산과 주택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산업과 주택수요의 요구가 결합되어 중산층 자산 형성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후기산업화 시대로 들어가고,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의 무한 경쟁은 산업화 시대에서 가능하던 교육과 고용, 그리고 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중산층 형성 기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였다.

한국 경제는 세계적 분업적 생산체제에서 기업단위의 경쟁력 전략이 지배하고 있다. 기업은 핵심노동력의 규모를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이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중산층의 수요에 기반을 둔 내포적 경제성장보다는 임금하락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과 핵심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전략이 주를 이루었고, 기업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어 여타 일자리 영역에서도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진행되었다.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경쟁은 국가 간의 경쟁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기업 중심의 임금하락과 고용악화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저성장체제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하나는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기회 구조를 해체하는 방향이다. 저성장에서는 사회적 기회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구조는 안정화되고, 이 안정화된 구조에서 과거 고도 성장체제 아래 선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던 계층은

지위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고, 사회의 기회 구조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전략을 취한다. 즉 사회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성장체제를 초래한 세계 경제의 경쟁적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고용불안과 임금 하락을 야기한다. 기존 양질의 직업적 지위들은 해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향은 사회 불평등 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적 동향에서 중산층은 기존의 기득권층에 의해 폐쇄적 기회 구조의 제한을 받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임금하락에서 하향적 해체의 경향을 띤다. 중산층은 양극화 과정에서 구조적 불안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 중산층 지위형성 기제의 작동은 멈춰지고, 중산층 신화가 등장한다. 고성장체제에서 만들어진 중산층의 형성 기제는 저성장체제에서는 단지 신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안정화하여 기득권 구조를 점유한 계층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층, 그리고 기존의 안정된 고용상황에서 배제되는 계층 간 이해관계의 갈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세대갈등과 계층갈등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을 통한 직업적 지위 획득에 대한 기대는 다음 세대의 교육에 무한정의 지출을 요구받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지출의 차이는 교육격차의 현실을 만들어 낸다. 세대 간 지위 재생산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 교육의 사회적 과정이 부모세대의 지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격차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중노동시장의 구조에서 기업 핵심영역의 안정된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 전략에 따라 더 제한되고, 과잉 지출된 교육자본은 노동시장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핵심영역은 더 축소되어 잉여인력에 대한 조기 퇴직과 퇴출로 이어지고, 동시에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지는 2차 노동시장의 규모를 확장한다. 저성장체제에서는 청년실업과 중장년실업이 만연화되고 있다. 저성장체제에서의 실업 상황은 2차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을 더욱 하락시키고 저임금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경제적 순환 과정, 특히 경제위기 시에는 자산의 증발 현상이 나타난다. 한 편에서는 경제의 새로운 토대가 정비되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축적된 자산을 소진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과정에 노출됨으로써 초래된 1997년의 외환 위기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는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탈산업화와 서비스 경제화의 진행으로 인한 실업 위기 속에서 실업과 함께 중산층이 그동안 축적한 자산은 점차 소진되었다. 특히 이 시기를 지나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고령층은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된 자산이 소진되면서 중산층에서의 지위하락과 함께 노령기 빈곤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베이비붐세대는 노동시장에서 핵심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나 이제 점증하는 퇴직압력에 의해 미래의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자산 보전에 대한 불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중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사회의 핵심부를 점유한 계층은 더 기득권적인 구조를 강화하려고 하고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계층에게는 삶의 질을 하향화하는 압력이 점증하고 있다. 중산층 내부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교육격차를 낳고, 고용격차를 구조화하며, 소득의 양극화 경향

을 초래하고, 자산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중산층의 내부 분화 과정에서 더 경직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중산층 형성의 기제는 이제 중산층의 분화과정과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신화로만 남아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탈산업화 과정과 저성장체제에서 중산층의 마지막 활로는 자영업 분야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막스 베버의 계층이론에 따르면 지위(status)는 다른 사회집단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받는 명예나 위세를 의미함. 계층(급)이 재산, 소득 같은 경제적 요소들에 의한 구분이라면, 지위(status)는 각 집단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음(윤자영 외, 2014; Giddens, 1998).

2) 대자보, 2009.06.25., “불평등 10년, ‘중산층 수난시대’ 한국복지”

3) 연합뉴스, 2015.10.28., “韓 55~64세 男 고용률 OECD 상위권…‘노후 걱정돼 한 푼이라도’”

4) 이데일리, 2015.05.22., “OECD ‘소득불평등 사상 최악…韓 노인빈곤율은 1위’”

5) 중앙일보, 2015.11.6., “62만원 vs 340만원… ‘노인 양극화’ 가장 큰 사회문제로”

6)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 0.302(2013년 기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7) 국민일보, 2015.07.02., “돈이 돈을 버는 사회……. 자산 따라 ‘천지 差’”

06

주택자산과 자영업층의 위기



주택자산과 자영업층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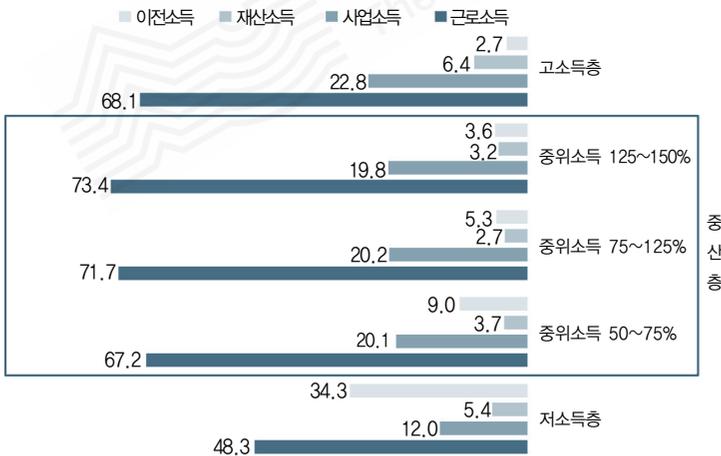
주택자산 형성과 활용

중간(中) 정도의 자산(産)을 가진 계층·계급(層)이라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은 중산층을 중산층이게 만드는 중요한 경제적 토대”이다(윤자영 외, 2014). 중산층의 자산형성은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산층은 임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고 한다. 상대적으로 자산에 기반을 둔 소득은 제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중산층에게 자산의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자영업층의 의미를 연계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중산층은 임금을 통해 자산을 모으려고 하고 주택 자산이 중산층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이를 노후와 퇴직 이후 자영업 진출의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나, 주택자산 형성과 관련된 부채 취약성과 자영업의 위기로 중산층은 불안한 상황에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재열(2014)은 소득과 자산이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하는데 자산은 실직이나 질병, 은퇴 등 갑자기 다가오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 된다. 중산층 삶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자산형성은 매우 중요하며, 자산의 차이는 곧 복원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2014년 「가계복지·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구는 소득의 71.4%를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 125~150%의 중상위소득계층은 근로소득 비율이 73.4%로 가장 높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소득의 34.3%를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고, 고소득층은 22.8%를 사업소득에, 6.4%를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1 수도권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표 6-1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

(단위: 만 원)

균등화가치분소득 기준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저소득층	1039.45	501.93	124.98	55.62	356.93
중산층	3905.18	2788.55	784.69	118.52	213.42
- 중위소득 50~75%	2463.56	1654.39	495.95	92.01	221.22
- 중위소득 75~125%	3998.45	2868.25	809.15	108.53	212.52
- 중위소득 125~150%	5708.56	4189.40	1129.47	184.92	204.77
고소득층	9825.41	6694.86	2243.15	624.04	263.36
합계	4968.95	3418.09	1055.21	242.60	253.05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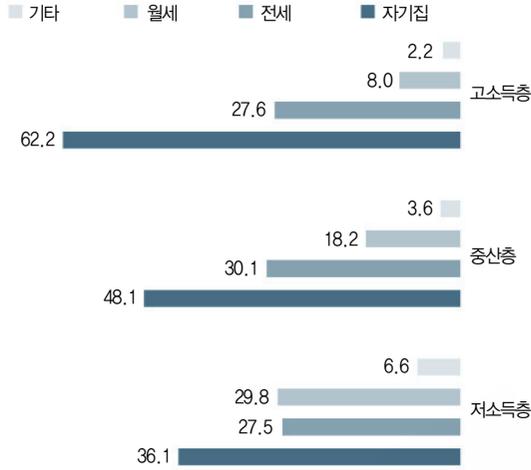
주 : 수도권 대상 총가구 수는 6,206임. 가중치 적용

중산층에게 주택은 안정된 주거의 대상이며, 동시에 자산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수도권 중산층가구의 48.1%가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은 전세거주 비율이 30.1%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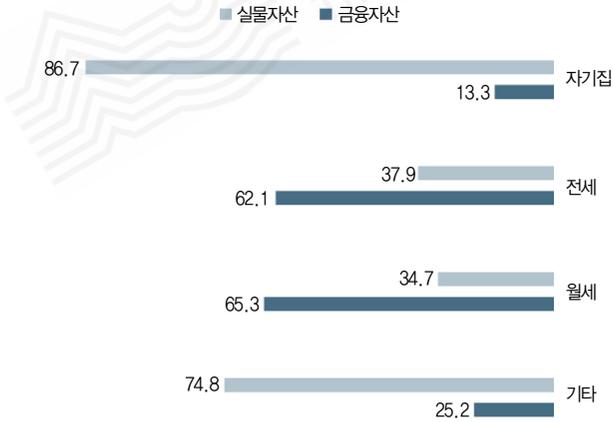
동일한 중산층 내에서도 주거 입주형태에 따른 자산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43,812만 원으로, 부채를 뺀 순자산액만 해도 35,261만 원이다.

반면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은 14,557만 원이고 순자산액은 8,927만 원에 불과하다. 전·월세 거주가구가 특히 금융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2 수도권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거 입주형태(%)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3 중산층의 주거 입주형태별 자산분포(%)

표 6-2 중산층의 주거 입주형태별 자산 현황

(단위: 만 원)

입주 형태	순 자산액	자산 총액	금융 자산	실물 자산	부채 총액	금융 부채	임대 보증금
자기집	35261,8	43812,0	5825,3	37986,8	8550,3	5967,9	2582,4
전세	19357,4	24751,6	15375,2	9376,4	5394,2	2727,2	2667,0
월세	4093,9	6007,1	3925,4	2081,7	1913,2	1508,8	404,4
기타*	8927,0	14557,5	3669,9	10887,6	5630,5	2747,6	2882,8
합계	23860,8	30148,9	8273,0	21875,8	6288,1	4066,2	2221,9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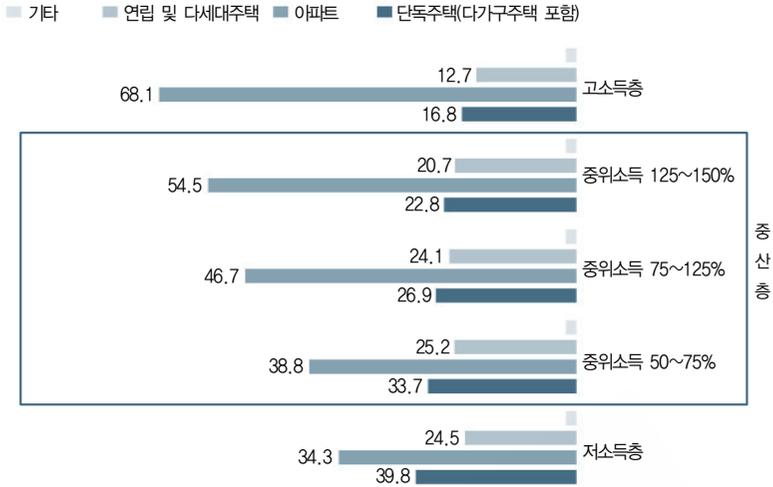
주 : 중산층: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50~150%

* 무상주택, 무상사택 등

계층별 주택소유 실태는 중산층의 절반 정도가 자가 소유 가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 중산층이 주택소유를 통해 중산층으로서의 지위안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산층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도 보여준다. 주택소유에서도 거주 지역이나 주택가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크다. 소재 지역에 따른 지역 간 격차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세훈(2007)은 주택소유 가구들의 주택 규모나 그 주거의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따른 중산층의 내부분화가 존재함을 규명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강남’과 ‘비강남’ 간에, 서울과 지방 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격차가 있다. 부동산가격으로 발생하는 지역격차는 지역 간 주거지 분화라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중산층에게 특정 주거지역은 중산층의 지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수도권 가구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4 수도권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39.8%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평균 전용면적이 59.12m², 거주주택가가 7,71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 신화에서는 안정된 직장 and 임금소득의 저축으로 자산이 형성된다. 그런데 실재는 저축의 형태보다는 미래소득에 기대하여 부채를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중산층은 그동안 소득과 고용안정을 발판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거액의 장기 대출을 받아 주택을 장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은 풍부한 보유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택금융에 접근한 뒤에 대규모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 및 집 늘리기에 나서는 적극적인 자산증식 전략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장세훈, 2008). 2014년 9월 동아일보가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48%가 주택 구입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생계자금은 10.9%, 사업 및 투자자금은 2.7%로 나타나고 있다²⁾

계층별 가계 부채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중산층은 평균 부채 총액이 6,288만 원이고 중산층 내에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부채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중산층은 금융부채가 4,066만 원으로 부채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이다.

임대보증금의 비중은 중상위소득계층 가구가 43.1%로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비교적 높은 특성상 주로 사업용으로 추정되는 자가 이외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6-3 소득계층별 거주주택 현황

(단위: m², 만 원)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전용면적	부동산 자산	
		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저소득층	59,12	7717,03	2944,08
중산층	74,62	12946,27	7657,28
- 중위소득 50~75%	69,55	10655,89	6165,36
- 중위소득 75~125%	75,71	13164,19	7181,53
- 중위소득 125~150%	78,82	15613,52	11147,25
고소득층	95,07	26167,59	28072,90
합계	77,27	15535,99	12270,87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수도권 대상 총가구 수는 6,206임.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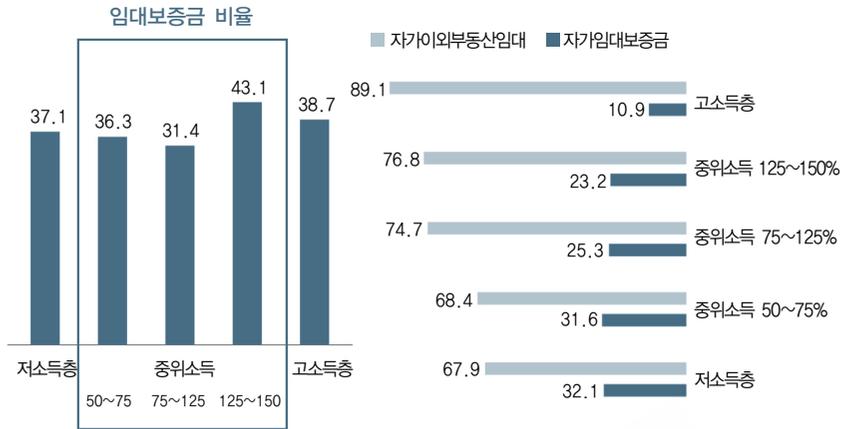


그림 6-5 수도권 가구의 소득계층별 현황(%)

표 6-4 소득계층별 부채유형

(단위: 만 원)

균등화처분 소득 기준	부채 총액	금융 부채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임대 보증금	자가 임대 보증금
				부동산 담보대출	거주주택 담보대출		
저소득층	2706.0	1703.3	1305.8	1064.9	863.0	1002.7	321.9
중산층	6288.1	4066.2	3405.9	2899.7	2080.2	2221.9	579.2
- 중위소득 50~75%	4955.8	3156.5	2569.0	2119.9	1678.9	1799.3	568.2
- 중위소득 75~125%	6281.7	4310.4	3637.5	3132.6	2207.3	1971.3	499.3
- 중위소득 125~150%	8217.3	4678.2	3949.5	3357.7	2295.1	3539.1	821.6
고소득층	15168.6	9303.6	7944.7	7155.9	4473.5	5865.0	641.5
합계	8014.8	5038.8	4239.2	3705.7	2499.5	2976.0	548.9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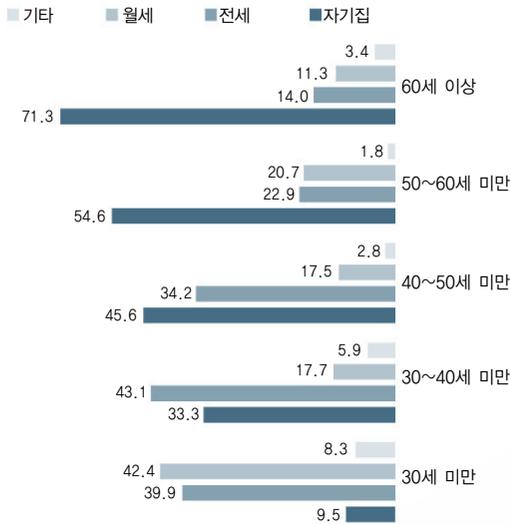
주 : 수도권 대상 총가구 수는 6,206임. 가중치 적용

저성장기조와 함께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세대별로 주택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그 자녀인 이른바 에코세대들은 자가소유에 대한 욕구가 낮으며, 주거사정 역시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

에코세대에게 주택은 자산증식보다 주거안정 수단으로의 인식전환이 기대된다. 에코세대는 경제력 부족과 소극적인 금융대출로 부모의 지원 없이 주택구매가 불가능하다. 저성장체제에서 사회진출이 30대 초반으로 늦어짐에 따라 주택시장 진입부터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다. 김지은(2013)은 에코세대들이 현실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전세 거주조차 힘겨워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에코세대 또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 집은 세대 간 전이 또는 부의 세습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부의 세습이 주택으로 가시화되고 주거계층화의 고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은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형성되고 확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과 중산층의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글이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자산이 안정적인 주거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노후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윤자영 외, 2014).

주택은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지위재의 특성이 있다. 장세훈(2008)은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의 주택의 의미를 규정한다. 주택소유를 통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고, 보유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의 수단으로도 기능한다고 말한다. 또한 주택은 “소유여부나 그 규모에 따라 주택소유자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6-6 중산층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입주형태(%)

표 6-5 중산층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부채 현황

(단위: 만 원)

	부채총액	금융부채	부동산 담보대출				임대 보증금	자가 임대 보증금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거주주택 담보대출	임대 보증금		
30세 미만	1066.0	990.2	679.0	219.8	207.2	75.8	0.0	
30~40세 미만	4992.9	4087.7	3340.1	2445.1	1957.8	905.1	40.2	
40~50세 미만	6409.4	4624.8	3830.3	3239.9	2403.3	1784.6	302.1	
50~60세 미만	7157.0	4272.6	3546.4	3200.0	2186.4	2884.4	528.2	
60세 이상	7697.4	3474.0	3172.1	3073.3	1948.7	4223.5	1951.3	
합계	6288.1	4066.2	3405.9	2899.7	2080.2	2221.9	579.2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수도권 대상 총가구 수는 6,206임. 가중치 적용

중산층: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50~150%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는 계급적 표지가 되기도 하는 일종의 지위재이다”(장세훈, 2008). 주택의 소유와 활용은 중산층 형성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 신화는 일자리를 통한 소득의 저축으로 자산이 형성되는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듯이 중산층은 부채를 일으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금융부채는 안정된 일자리와 미래 소득을 전제하기에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주택으로 이어짐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은 중산층 자산의 근거이고 이를 통해 노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산이 활용되는 또 다른 기제로 자영업의 진출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중산층이 직면하는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본다.

이러한 기제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의 특별 보고는 저성장체제에서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주택 소유와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저축 가능성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중산층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주택 소유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소유가 경제적 상황에서 멀어지면 중산층의 진입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주택 소유는 이미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게 한다. 고소득층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서 부의 소득효과를 누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가 가능하지 않고 동시에 임대비용의 상승도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로 형성된 자산은 계층을 구획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창흠(2015)은 주거불평등 문제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불안감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강조한다.

을 중심으로 한 자산격차의 확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계부채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들의 계층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자산소유의 불평등은 중산층의 하향 분해를 촉진하고 있다.

자영업계층의 재생산 위기

저성장체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고용체계 변화는 자영업에 대한 시각을 다시 점검하게 한다. 자영업은 중간계급의 구조 변화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자영업은 중산층 분해 과정에서 결절점을 이루고 있다.

앞서 계급구조에 대한 논의에서 중간계급은 현대조직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게 된 임금생활자 중심의 신중간계급과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서 약화되리라고 예측되었던 자영업 중심의 구중간계급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구중간계급 모두 증가하였으나 신·구중간계급 내부적으로 크게 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중간계급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상적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의 변화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홍두승(2005)은 “현대 사회는 양극화에 따라 중산층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계층의 꾸준한 증가와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다양화로 중산층이 내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자영업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 생존전략의 수단이 되거나 계층이동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두승(2005)은 구중간계급, 즉 자영업계층의 규모는 1980~1990년 기간에는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

고 있다. 1960~1980년까지의 증가가 비농 자영업으로의 농업인구 편입을 통해 발생하였다면, 1990년 이후의 증가는 신중단계급 및 노동계급으로부터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홍두승의 시각을 그림으로 보면 계급구조와 계층현상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중산층은 계급구조에서 신중단계급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구중단계급, 그리고 노동계급을 포괄한다. 그런데 계층의 변화는 중단계급에서 신중단계급이 구중단계급으로 전환하고 노동계급 중에서도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다시 소득계층의 분화를 야기한다.

우리 사회 계급의 변이과정에서 자영업층의 확대재생산은 고용시장의 변화와 밀접히 연결된다. 조기퇴직으로 인한 고용시장에서의 퇴출은 중산층에게 생업의 활로로 자영업을 고려하게 한다. 그리고 자영업은 중산층이 소유하는 주택을 자산화하여 이루어진다. 주택자산을 담보로 치열한 시장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은 중산층의 분화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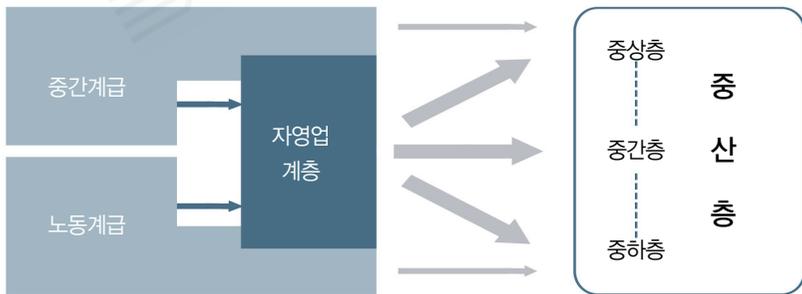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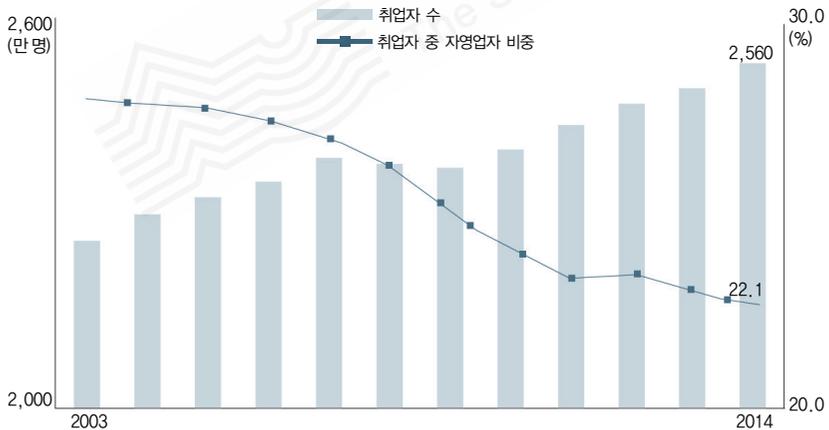


그림 6-8 자영업계층과 계층적 분화 현상

2014년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2%로 최근 11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영세자영업자 수는 2014년 약 524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약 92.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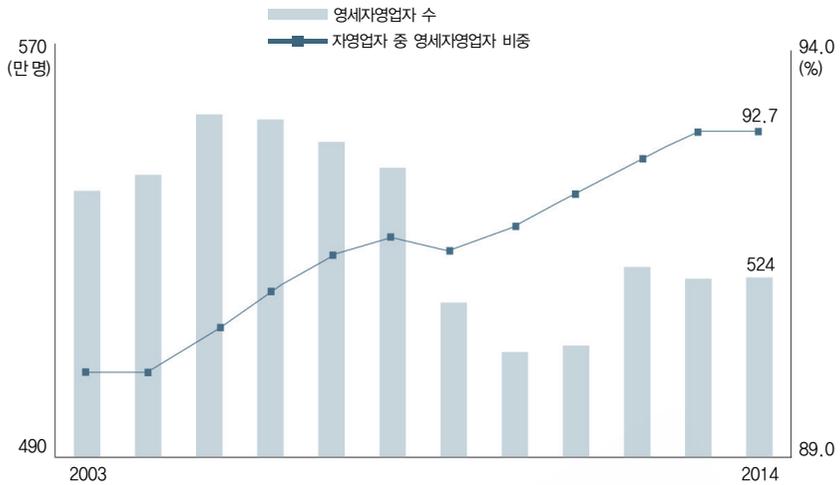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 중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 증가는 자영업자의 중·고령화 및 자영업의 저부가가치 집중화 추세와 맞물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악화하고 가구 간 소득 불균등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이진영, 2015).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자영업자 수는 96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취업자의 18.7%로 나타났다⁴⁾. 서울시 자영업자는 2005년 23.6%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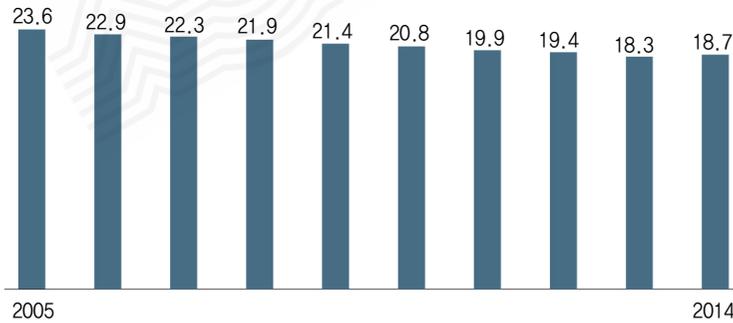
자료: 이진영(2015);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9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자료: 이진영(2015);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10 영세자영업자 수 및 자영업자 중 영세 자영업자 비중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중상상지위별 취업자」

주 : 서울시 경제활동참가자 중 중상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제공하는 지정통계 자료

그림 6-11 서울시 자영업자 비율(%)

서울시 사업체조사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서울지역에 가장 많은 생계형 사업⁵⁾은 한식음식점업(48,521개)이었으며, 그다음은 용달 및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업(35,460개), 의류점(23,239개),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21,258개)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생계형 사업은 비알코올 음료점(커피숍, 주스 전문점)이었으며(2,868개 증가), 용달 및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업과 의류점도 1,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2011년 대비 1,386개소 감소하였고, 슈퍼마켓(858개소 감소)과 당구장 운영업(650개소 감소), 컴퓨터게임방 운영업(628개소 감소)도 줄어 들었다⁶⁾.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수도권 중산층 가구의 종사상지위별 소득과 자산구성을 보면 우선 자영업층과 임금근로자의 소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소득의 수준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4,988만 원, 그다음이 상용근로자 4,198만 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12만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소득 수준이 상용근로자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의 규모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1억 3,790만 원 수준이고 그 뒤를 이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7,961만 원, 상용근로자가 5,58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여부를 통해 사업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부채가 많고 부동산 대출규모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6 중산층 가구의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자산 분포현황

(단위: 만 원)

종사상 지위	경상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자산 총액	금융 자산	실물 자산
상용근로자	4198,0	3965,7	81,9	55,7	25885,7	8706,5	17179,2
임시일용 근로자	3191,7	2843,6	110,7	57,5	15708,3	4583,9	11124,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988,4	714,7	4076,9	98,3	49192,6	13432,0	35760,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12,2	917,9	2856,8	95,4	36886,3	8508,7	28377,6
기타종사자	3097,4	536,2	2366,4	53,4	19656,9	7147,5	12509,4
무직자 등	2997,8	1161,7	210,4	584,6	55654,6	9241,7	46412,9
합계	3905,2	2788,6	784,7	118,5	30148,9	8273,0	21875,8

종사상 지위	부채 총액	금융 부채	담보 대출	부동산		임대 보증금	자가 임대 보증금
				담보 대출	거주주택 담보대출		
상용근로자	5587,7	3826,0	3165,7	2530,3	2015,7	541,1	1761,7
임시일용 근로자	3594,0	2377,1	1913,6	1633,1	1248,2	329,5	1216,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790,2	9182,3	7833,5	7169,4	4308,4	1062,0	4607,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7961,0	5330,9	4482,9	3978,7	2648,9	654,9	2630,0
기타종사자	4710,0	3034,9	2135,8	1699,7	1575,7	693,0	1675,1
무직자 등	8165,4	3712,5	3400,8	3259,3	1846,7	276,4	4452,9
합계	6288,1	4066,2	3405,9	2899,7	2080,2	526,1	2221,9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 수도권 대상 총가구 수는 6,206임. 가중치 적용

중산층: 균등화가처분소득 기준 50~150%

최근 들어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서라기보다 폐업자가 진입자보다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4년에서 2013년 동안 개인사업자 창업 수는 949만 개, 폐업 수는 793만 개로 자영업 생존율이 16.4%로 보고되었다⁷⁾.

한국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된 이유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갈 곳 없는 장년층의 불안해진 소득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체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진출한다.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며 장기적 불황과 치열한 시장 환경으로 또 다른 생존 불안을 겪게 된다. 결국 사회보장 없이 자영업으로의 이동은 낮은 성공확률과 그리 높지 않은 소득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증가를 초래한다. 영세자영업자는 경기침체 영향을 받으며, 대형할인점이나 유통 체인점에 밀리고, 영세자영업자끼리 과열 경쟁에 치여 구조조정되는 추세이다.

중산층은 고용시장 불안 환경과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존전략 수단으로 자산을 활용하여 자영업으로 이동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으로의 하락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중산층은 하향 분해되고 있다.

1) 동아일보, 2014.09.01., “대출규제 풀자 가게 빛만 급팽창”; 금융감독원, 2012.7~2014.3 신규취급액 기준

2) 금융감독원, 2012.7~2014.3 신규취급액 기준

3) 2015년 11월 24일 한국은행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천166조 374억 원이라고 함.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천102조 6천억 원이고 전 분기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이 11조 5천억 원으로 80%를 차지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음.

- 4) 2015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97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8만 2천 명)보다 10만 7천 명 감소하여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연합뉴스, 2015.08.09.).
- 5) 생계형 사업이란 한식당, 치킨집, 분식집,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세탁소 등 자영(개인)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임.
- 6) 서울시, 2013, '사업체조사' 참조; 조사기준시점(12.31)과 조사시점(익년도 조사기간 중) 사이에 폐업된 사업체는 그 장소에 입주한 사업체로 대체하였고, 조사기준시점과 조사시점 사이에 폐업되어 조사되지 못한 사업체는 직전연도 실적으로 결측치를 대체함.
- 7) M이코노미뉴스, 2015.09.08., "기रो에 선 자영업"



07

중산층과 사회정책



중산층과 사회정책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중산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금융위기 때 제기되었던 부의 불균형과 상층계층으로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이전되어 불평등구조에서 중산층의 재건과 복원이 더 강조되었다.

중산층 복원의 관건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의 자원 재분배와 지원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정책과 미국의 중산층 정책을 소개하고 영국 학자의 불평등 개선 제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중산층 정책 우리 정부는 중산층 감소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의 중산층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서민의 중산층복원을 추진하며 미래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강성진 외, 2010).

경제위기 이후 재정경제부는 2003년 9월 「서민·중산층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지원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건강보험, 연금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충하였으며, 국민건강 증진,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복지 강화 등의 정책이 [표 7-1]과 같이 시행되었다(홍석표 외, 2003).

2011년 미래기획위원회는 사회 양극화 및 중산층 위기와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포괄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으로 복지체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하여 복지, 교육, 노동 등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정책 기조로 ‘휴먼뉴딜’ 정책을 제안하였다¹⁾.

특히 미래기획위원회는 서민·중산층 생활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으로 주거, 교육, 보육, 의료, 실업, 재취업, 노후 등 7가지를 들면서 재정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내신 절대평가화, 교원평가제와 인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택분야에서는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주택건설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가계부담 경감 정책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표 7-1 중산·서민층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대책

정책종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 저소득층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 퇴직연금제도 도입 ·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교육 확대 ·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 등 지원 확대 ·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 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사업 확대 실시 · 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 장애인 직업재활대책 ·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임대주택 건설 · 서민주택금융 강화 ·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원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 국민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 · 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자료: 홍석표 외(2003); 재정경제부, 2003.9.,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대책”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의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중산층 복원에 이르는 주된 전략은 고용률 제고이며, 정책목표는 ‘고용률 70%를 통한 중산층 70% 달성’으로 요약된다(윤희숙, 2013).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약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산층 복원을 핵심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부 정책 목표 상의 중산층 70%는 소득에서의 중산층을 전제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중산층은 67~68% 수준의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다. 정부의 임기 말에 공약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²⁾.

기획재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고용상황을 타개하고자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2015~2017년간 2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년연장 등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부조화)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전세공급 부족과 가속화되는 월세 전환 현상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는 [표 7-2]와 같이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가 주요 내용이다.

표 7-2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강화 지원대책

정책종류	내용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 확대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도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고령층 전세임대 신설, 대학생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 ·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 공공실버주택 공급 · 행복주택·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강화 - 고령자의 LH임대주택 입주 계약금 용자 지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 지원대상 확대 등
뉴스테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시범사업 성과 가시화 - 2015년 내에 1,4만 호 리츠영업인가 완료 및 6천 호 입주자 모집 · 다양한 부지 활용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량 확대 (2016년 목표: 2만 호) ·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뉴스테이 관계법령 및 하위법령 정비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포털을 마이홈 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이홈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주거 지원 전반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 실시 · LH임대주택 콜센터를 마이홈콜센터로 전환하여 주거지원정책을 1차 (정책 전반 전화상담), 2차(주거급여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로 세분화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방식 대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부담 완화 등 ·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 CEO조합 제도 도입,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

자료: 국토교통부, 2015.09.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 미국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 내에 중산층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교육, 노동 등 5대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³⁾하고, 2010년 1월 ‘미국의 중간계급(Middle Class in America)’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3년 2월에는 ‘강한 중간계급 그리고 강한 미국’이라는 계획(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 & A Strong America)을 발표⁵⁾하고, 번영하는 중간계급은 미국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엔진을 재발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 동안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확대하여 미국의 중간계급을 강화하고, 이러한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며, 이들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조, 청정에너지, 인프라, 교육에의 투자를 통해 중간계급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오바마는 2015년 1월 20일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천명하였다. 이른바 ‘중간계급 경제학(middle-class economics)’⁶⁾이 그 요지이다. 미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가와 1% 부자들에게 자본소득세율을 15%에서 23.8%로 끌어올린 데 이어, 2015년 28%까지 증세하는 대신 상속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에게 10년간 걷어 들인 세금 총 3,200억 달러 중 2,350억 달러는 중간계급의 교육, 아동보육, 퇴직연금 등의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에 의한 자원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2013년 제시된 오바마의 중간계급 육성정책에는 크게 근로자보호와 일자리 창출, 근로가정의 세제지원, 교육 강화, 의료보험의 확대, 주택소유자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표 7-3 오바마의 중간계급 정책

구분	주요내용
근로자보호와 중간계급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제조업 부문 지원 · 녹색일자리
은퇴 후 생활안정	· 직장연금 보완 · 근로자들의 저축 장려 · 노령연금제도 보완
직장인들의 가사 부담 완화	· 어린이 보육(어린이 보육료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저소득가구에 어린이 돌봄 도우미 확대, 조기교육 예산 증액) · 가정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 대한 보조 · 더욱 유연한 직장생활(유급휴가의 확대,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 확산, 요양을 위한 무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 확대) · 대학교육 기회의 확대

자료: 이은우·박동렬(2013)

2015년 오바마의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발표된 중간계급 경제정책은 크게 [표 7-4]와 같이 중간계급 가정에 대한 부담 경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보전이 그 핵심내용이다.

중간계급 경제란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받으며, 동일한 규칙하에서 경쟁할 때 국가가 최상의 발전을 한다는 개념이다. 중간계급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보육,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중간계급 및 저소득 가정의 부담 경감(Affordability)이다. 두 번째는 교육, 기술훈련을 통한 고임금 노동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 조성, R&D 등을 통해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신(新)선진경제(New Advanced Economy) 창출이다. 일자리분야는 산업정책으로 접근하고, 중간계급 가정의 부담을 절감하게 하며, 고용과 연계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표 7-4 오바마의 중간계급 정책(2015년 미국의회 국정연설 내용 기반)

구분	주요내용
중간계급 가정에 대한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소득에 최고 28% 세율 부과 → 중간계급 가정 지원 · 가정의 자녀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해 ①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3,000달러로 증액, ② 4세 아동에 대한 프리스쿨 취학 지원, ③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조치 추진 · 각 주정부가 유급 질병 휴가 등 유급 휴가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 신청 · 연방의회가 최저 임금 상향을 입법할 것을 촉구, 각 주·시 정부 및 기업도 자발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권유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지급을 체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할증료를 1.35%에서 0.85%로 삭감하여 중간계급가정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지도록 지원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에게 2년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하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 · 과학기술(STEM)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차세대 고등학교(Next Generation High Schools)를 신설 · 학비지원 절차 단순화로 참여도 향상, 교육관련 세제 혜택 프로그램 정비 · 근로자들이 더 유망한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 지원
미국의 일자리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개혁, 도로 및 교량 등 낡은 인프라 개선, 기업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 TPP 및 TTIP 등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외국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 · 정밀의약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 · 미국의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동시에 미국이 클린에너지 기술 분야를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장려 · 연방 의회에서 통합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켜 미국 내 노동가능 인구 강화 · 중소기업 세금신고 간소화 등의 조치로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자료: 오바마 행정부의 증산총 경제 설명자료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OCCAQFjAAahUKEwi_197YguLIAhXnG6YKHV-ECzw&url=http%3A%2F%2Fusa.mofa.go.kr%2Fwebmodule%2Fcommon%2Fdownload.jsp%3Fboardid%3D14439%26tablename%3DTYPE_LEGATION%26seqno%3D033023fffad013fdb060042%26fileseq%3D01319d07afa00050521c0000&usq=AFQjCNG8iV2nJ9XQh4oNXPA2Q3UefuPA)

영국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앳킨슨의 제안 영국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산층 복원정책인 영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다국적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 환경 프로젝트 부문에 100억 파운드(약 15조 원)를 투자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영국사례로 앤서니 앳킨슨의 제안⁷⁾을 살펴보고자 한다. 앳킨슨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보다 포괄적이고 정책의 근간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노동시장에서의 대응, 개인의 자원 형성과 국가 자원의 확보, 세금체계 개선, 그리고 사회적 보장의 확충을 제안하고 있다.

기술변화 대응과 사회경제협의회

앳킨슨(2015)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변화에 의해 확대되는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첫째, 정책결정자들이 기술변화의 방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며 서비스 제공의 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의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적절한 힘의 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정책에 뚜렷하게 분배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노동조합이 대등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보장하며, ‘사회경제협의회’가 필요하다. 즉 기술적 변화에 대한 공공정책의 대응으로 정책결정자의 정책 방향 설정과 전 사회적 대처가 중요하다.

고용과 임금

앳킨슨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과 근로소득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실업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명시적인 목표를 채택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공공부문 고용을 보장해줌으로써 이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으로 법령

에 따라 생활임금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을 구체화하는 것이다⁸⁾.

자본의 공유

엡킨슨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형성 토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1인당 보유 한도를 둔 국민저축채권을 통해 저축에 대한 플러스 실질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모든 성인에게 배분되는 기초자본이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분을 공공이 보유하고 국가의 순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부펀드가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 내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가 공적 자산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세금과 관련 누진세 강화

영국은 최고세율이 1979년 60%, 1988년 40%로 인하하였다. 엡킨슨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개인 소득세에 대해 더 누진적인 세율 구조로 돌아가야 하며,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한계세율을 65%까지 올리면서 이와 함께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개인 소득세에 근로소득 첫 구간에 한해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상속과 관련해서는⁹⁾ 상속받은 재산과 생존자 간 증여 재산은 누진적인 평생자본취득세 체계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넷째, 최근 시세로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비례적인 재산세 또는 누진적인 재산세가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사회보장 측면에서 엡킨슨은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어린이에게 상당한 금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물려야 한다. 둘째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유럽연합 전역의 어린이 기본소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나라 별로 참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는 사회보험을 새롭게 해 급여 수준을 늘리고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넷째는 부자 나라들이 공적개발 원조 목표를 국민총소득의 1%로 올려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영국을 넘어 세계적인 불평등에 대한 영국의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

중산층 정책의 방향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안되었던 중산층 정책은 크게 고용안정화 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안정화 정책은 고용을 중심으로 능력 개발과 소득 향상을 포함하며, 교육정책은 공교육 확충을 통해 중산층의 교육비를 절감시키고 교육과 고용을 연계시켜 교육효과를 실제적 기회 확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자활기회의 확대를 통해 예방기능을 확충하며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고 실업, 질병, 노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이 글에서 제시된 중산층의 분화와 지위재생산 기제와 관련해 사회 구조적 경향을 고려하여 기존의 중산층 관련 정책 방향을 재구조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중산층 정책의 대응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중산층의 분해 및 분화와 관련된 중산층 복원과 재건 방향이다. 두 번째는 중산층의 구조적 불안에 대한 안정화 방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산층의 계층의식과 계층이익에 대한 시민성의 대안 모색 방향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불평등 구조와 지위재생산의 기제로 연관되어 있고, 세 번째는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중산층의 재건과 복원

자원의 재분배 기능 확충 중산층의 구조적 분화와 함께 불평등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확충한다. 신자유주의의 시장적 질서 강화는 자원 분배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의 효율성은 사회적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념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공급자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수요자 기반의 경제 성장을 적극 모색하면서 중산층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앳킨슨(2015)이 제안한 누진세 강화 방식과 미국에서 실행하는 부자들에게 대한 증세로 자본소득세율의 인상과 상속세 강화 방식이다.

이중노동시장의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 결과는 안정된 일자리와 불안한 고용이라는 이중노동시장 현상으로 나타난다. 고용상황의 문제와 저임금은 이중노동시장이 강화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수준의 임금에 대비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낮은 임금의 이중노동시장은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안적 경제 전략에서는 고용과 임금이 안정화되면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 전략은 더 유연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경제의 성과를 높이는 ‘포용적 성장’은 이중노동시장의 해소에서 시작된다. 고용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성을 전 부문에서 높이고 그에 따른 안정된 임금 수준은 중산층의 수요를 확장시킨다.

사회 불평등 구조의 확대는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에서 기원하기에 정

책의 초점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중노동시장의 해소에 두고 구체적으로 고용 안정화와 임금 수준 제고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고용창출과 노동 생산성 향상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노동시장 상황에서 고용창출 규모의 위축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유형에서도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채용전략은 신규 구직자가 아닌 경력자가 선호되고 있다. 신규 구직자는 높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잠재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은우·박동렬, 2013).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내에서 기업의 이윤추구 전략은 고용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현재 기업은 일자리보다 이윤을 고려한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를 제한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의 자원재분배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는 기업에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와 공공기업의 공공 서비스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주요 일자리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사회 전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하게 된다. 공공부문을 위주로 한 고용의 안정화와 적절한 임금 수준의 제고는 이중노동시장 해소에도 이바지한다.

일반적으로 왜곡된 인식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는 가정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은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고용에서의 기술 숙련도에 좌우되고 기술 숙련도는 작업장에서의 현장 경험과 함께 교육에 의해 높아진다. 사회의 평생학습체계는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재구조화할 수 있다. 김경혜(2009)는 중산층 대책에서 언제라도 전업이나 재취업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갖추도록 평생직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고용 안정성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평생학습체계에서 노동생산력의 상향 노력이 따를 때 양립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충과 안정된 고용상황, 그리고 노동자의 기 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은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러한 노동력 향상은 다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시장과 자영업의 보호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이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최후 보루로 재생산되고 있다. 불안한 고용시장과 조기 은퇴 시대에서 노후의 자산 활용과 소득 활동의 하나로 자영업이 출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자영업의 비중은 중산층 문제와 연계된다. 치열한 시장 경쟁상황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약탈적인 상거래 관행은 자영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자영업에서의 실패는 자산 소진과 노후 불안을 증가시키고 중산층의 분해에서 계층 하향화와 양극화 경향을 만들어 낸다.

자영업 문제를 경제구조나 경제 효율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오히려 자영업은 중산층의 복원과 재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영업의 경제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한 시

장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약탈적 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중장년층의 창업과 함께 청년층의 창업 지원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중산층의 안정화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중산층의 구조적 불안은 사회보장체계를 이용해 우선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실업, 산업재해, 질병, 노후에 대한 4대 사회보험체계는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안정된 고용과 높은 임금수준과 연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2차 노동시장에서의 사람들은 4대 보험체계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취약한 보호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 한계계층 또는 빈곤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보장받고 있다. 중산층 중에서 취약한 중하위계층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보완하여 공공부문과 정부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체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소득 보전과 임금지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집단과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별적 잔여적 복지체제는 모든 종류의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복지혜택을 특정한 계층에 엄격히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중산층을 고려한 복지혜택과 사회보장체계에서는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수요층을 확대하는 전략이 중산층의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 복지지출은 지원비용이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공공 사회서비스의 확대 중산층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정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적 사항이 된다. 미국의 오바마 중산층 정책에서는 가정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이 중요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중 가계부담 덜기의 다양한 사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조응한다.

중산층의 가계부담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육과 양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가계의 지출은 중산층 형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에서는 공급자의 경쟁과 함께 수요자의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지출을 한계까지 확장하고 이 때문에 중산층의 가계 부담은 점점 증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중산층에 제공하는 것이 시장에서 서비스 불안을 막고, 공공부문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이다. 자원재분배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지출을 공공부문에서 확장하는 것이 중산층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주축이 되고 시장의 서비스가 보완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체계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은 중산층 형성 신화의 시작이며, 지위재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혜(2009)는 중산층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교육비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자녀의 교육비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중산층 탈락 및 저해, 부

모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교육투자의 격차로 인한 세대 간 이동성 저해 등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은 중산층의 시작인 동시에 중산층 형성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교육에 집중되고 있다. 이은우와 박동렬(2013)은 교육정책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로 인해 계층 간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며, 학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교육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계층구조와 연관되고 고용시장과 연계된 사회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기회와 과정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하고, 중산층적인 삶을 지원하는 복지와의 연계체제는 앞서 본 사회서비스와 같이 공공성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에 대한 공공적인 투자의 확충과 공적 교육의 기능 강화는 사회적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중산층 가계 부담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의 제한을 고려하고 사교육 시장을 더욱 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적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격과 선발에 치우친 교육과정은 교육의 본연 목적인 인간의 자기 능력 배양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주택자산과 주거 안정화 중산층에게 주택은 자산형성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거안정의 보루이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의 신화는 주택소유에서 찾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노후 안정화와 지위의 확보에 주택의 소유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 중산층의 주택소유 확대와 이를 위한 금융적 지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가계부채의 확대와 주택가격의 상승이 순환적 과정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더욱 증폭하는 금융기법이 있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채권과 보험의 위험전가 기제가 금융시장을 마비시키고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주택소유와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중산층 정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할증료 조정수단은 단기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지만 이전의 중산층에 대한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도 주택금융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경제적 결과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주택과 관련된 중산층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중산층의 소유욕구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를 전제로 한 약탈적인 금융지원, 주택자산 구입 경쟁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이를 강화하는 주택산업시장, 이를 경제 활성화로 보는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는 가계부채 증가의 순환적 과정이 위기를 만들고 있다.

중산층의 주택과 관련된 정책은 이제 공공적인 접근방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주택을 시장질서의 수요 공급 문제로 보아 이를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중산층의 자산 양극화 기제에 의해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주택소유보다는 주거 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자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강화는 주택 자산화와 주택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간주하는 현실을 극복하게 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중산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는 주택자산과 관련된 중산층 자산 불평등 문제와 주거 관련 비용과 함께 가계부채의 증가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중산층과 시민성

중산층과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중산층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정책의 주체로 만드는 일이다. 이제 중산층을 시민으로 만들고 정치참여의 주체로서 시민이 정책을 주도하는 과제가 중산층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서구 역사에서 시민은 중간계급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도시에서 중간계급을 의미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중간계급은 계급의 제한을 넘어 시민으로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배적 공공적 이념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는 계급적 이익의 지향을 넘어 가치적이고 공공적인 이상을 구현하려는 운동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운동보다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은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적 과정의 참여로 형성된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민이 만

들어지는 과정이면서 시민의 역량이 확충되는 과정이다. 또한 참여의 과정에서 시민성은 학습된다. 공공적 가치로서 자유로운 시민과 평등한 사회 및 공평한 기회, 부조리한 불평등의 개선, 공정한 사회질서 및 시민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 이를 토대로 한 시민의 권리 확보와 구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학습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확보하면 중산층 정책방향은 설정될 수 있다. 앳킨슨(2015)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려면 사회경제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사회의 분배구조에서 계급적 이익이 대변되고 합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계급적 이익은 대립되고 갈등 양상으로 대치될 수 있다. 계급적 타협은 공공적 가치에 대한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려면 계급에서 벗어나 시민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협의회는 시민의 사회적 참여 기제가 되어야 한다. 계급적 이익을 넘어 기득권을 해체하고 계층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일은 시민이 주도하여야 한다.

민주적 질서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형식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된다. 그러나 현실은 제한되고 이해대립의 장소로 나타난다.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이 역량을 확충하고 시민사회를 주도하며,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공공적인 가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로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 이 시작은 정부의 시민에 대한 개방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신뢰체계의 토대를 만들면서 시민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사회적 문제에서 시작된 중산층의 문제, 즉 불평등 사회구조의 확대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제 중산층이 시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책의 실마리가 찾아질 것이다. 시민은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토대이다. 정치적 참여 과정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포용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연대로서 사회통합을 구현하여야 하는 책임이 시민에게 있다. 중산층은 사회보장체계를 확충하는 복지국가의 시민권자로서 공공적 가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
- 1) 매일경제, 2011.01.21., “휴먼 뉴딜프로젝트 추진…가계지출↓ 수입↑ 복지는 강화”
 - 2) 3장의 중산층 추이 참조
 - 3) 매일경제 MBN, 2012.03.28., “美·英·덴마크…중산층 확대가 핵심 정책”
 - 4) 미국의 중간계급 의미는 2장을 참조하길 바람.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산층으로 사용하였으나, 미국은 Middle Class라는 용어를 중간계급으로 번역함.
 - 5) THE WHITE HOUSE, 2013, ‘The President’s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 & A Strong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uploads/sotu_2013_blueprint_embargo.pdf
 - 6) 한국경제, 2015.01.21., “오바마 국정연설 ‘미(美) 위기 그림자 지나갔다…이젠 중산층 경제 살려야’”; CNN WIRE, 2015.01.20., “Obama focuses on ‘middle-class economics’ in State of the Union tax plan”
 - 7) 앤서니 B. 오티슨, 장경덕 옮김, 2015, 『불평등을 넘어 :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항아리
 - 8) 영국은 1999년 4월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러프버러대학의 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최저소득 기준을 개발했는데 (런던 밖의) 생활임금은 실제 영국의 국가 최저임금보다 약 20% 높음.
 - 9) 영국에서 상속세 수입은 2013~2014년 소득세로 걷은 금액의 약 2%였으며, 50년 전의 9%에 비해 상속세가 줄어들었음.

08

중산층에 대한 우려와 기대



중산층에 대한 우려와 기대

중산층,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중산층에 대한 마지막 단상으로 저자는 역사에서 중간계급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중산층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단지 경제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 동향은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특성을 함축하며 중산층이 속한 바로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중산층의 양극화, 분화, 분해 경향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며, 불만의 표출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따라 사회적 해체의 위험을 함축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역사에서 민주화와 복지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중산층, 중간계급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중간계급과의 관계는 정치학의 오래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인식은 중간계급이 민주주의 토대이고, 민주주의에서 중

간계급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타났고 20세기 말 전 세계적인 민주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 사항이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를 지칭하는 중간계급의 성장과 이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게 되었을 때 제도화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는 중간계급의 역할이 중추적이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중남미의 권위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계급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를 통해 성장한 중간계급이 민주화를 이끄는 중추가 되었다.

그런데 21세기 상황은 중간계급과 민주화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한다. 20세기에 민주화된 국가 중의 일부는 권위주의로 회귀하였고,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권위주의로 복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 조슈아 켈렌직은 권위주의 복귀의 지지기반으로 중간계급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간계급의 역할 변화는 기존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 개혁과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지 못함으로써, 중간계급의 물질적 토대가 훼손된 현실에서 발견된다. 민주화된 국가의 무능력이 중간계급의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민주화된 질서에서 노동계급과 빈곤층의 경제적 배분에 대한 개선 요구는 중간계급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중간계급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구 역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견된다. 1929년 이래 세계 대공황과 더불어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등장은 구중간계급의 몰락과 계급의 급

진화된 태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경제 파국은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구 중간계급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사회 불안으로 급진화된 운동과 접합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와 독재정치가 민주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21세기에는 경제개혁의 부작용이 더욱 증폭되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사회 불평등 구조를 양극화하여 중간계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중간계급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과정의 양상을 보면 중하층 중간계급의 사회적 불안과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현격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평등 구조의 개선 요구와 불안한 지위에서 오는 외부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 형성 등은 계급적 불안의 사회적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민주화의 후퇴와 서구의 경험을 보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간계급의 행위지향이 민주화 진행을 좌우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민주화과정에서 계급이익이 표출되고 계층 간의 이해대립이 계급 갈등으로 치달으며, 경제개혁이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계급의 불안은 권위주의 복귀나 파국적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역사의 또 다른 길은 민주화된 정치체제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된 국가들에서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중간계급을 포용하는 복지국가가 등장한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말미에 복지국가 정책을 입안하였고, 미국은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전후 복지국가를 이루는 정책들을 시도하였다. 민주화된 정치 질서에서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사회정책은 중간계급을 위한, 그리고 중간계급의 토대를 강화하는 복지국가 정책으로 실행되었다.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복지정책들은 중간계급의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실업과 질병, 노후에 대한 안정보장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20세기 독일은 중간계급의 안정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시스트 국가의 성립과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참화를 겪었다.

20세기 중반에 서구의 복지국가 정책은 빈곤층을 포용하고 중간계급을 강화하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교육, 보육, 부양 및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위한 사회정책들은 중간계급의 생활수준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다.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국가는 중간계급의 토대를 확충하고 안정된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강화한다.

서구 역사는 복지국가의 성립에 사회계급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의 성립에 노동계급이 주도한 사실이 강조되는데 중간계급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중간계급의 정책적 지향의 가설을 보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구중간계급은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임금 노동을 전제로 한 신중간계급은 고용안정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지향한다.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중간계급의 두 계층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현실 정치는 계급적 타협을 동반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제로 해소할 수 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정책 특성으로 간주되는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체계는 신중간계급의 성장과 같이 하면서, 실업, 질병, 노후에 대한 안전망과 사회서비스를 통한 보육, 부양, 교육 등 복지체제

를 정착시켰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 중부유럽의 보수주의 국가체제는 구중단계급의 경제적 안정성과 신중단계급의 복지수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중간 계급을 중심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우려되는 길은 역사적 선택의 실패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복지체제를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성공하는 길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면서 복지국가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단계급의 역할이 이 길을 선택하게 할 것이다. 중산층의 양극화는 중산층의 구조적 불안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정치적 의미는 민주주의 질서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향방을 좌우한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정책의 중심에는 중산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다시 중산층 의제로 돌아가면 계급적 이해를 넘어 전체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담지하는 시민의 형성과 시민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으로 거듭나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며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역사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제 중단계급과 중산층에 달려 있다.

1) 컬렌릭은 민주주의의 후퇴현상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공통되는 현상으로 보고 중산층의 배반이라는 의미를 담음(조슈아 컬렌릭(Joshua Kurlantzick), 2015).

- 강성진 외(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2010, 「중산층의 추이, 이탈원인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2012, “2000년대 후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과 특징”, 2012년 사회정책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외 3인, 20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신욱 외 3인, 201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원택 외 4인,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1세기북스.
- 강원택, 2014, “사회 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강원택 외 4인,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21세기북스.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1,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도서출판 밌.
- 금현섭, 2015, “‘불평등’과 ‘이중구조’, 그 개념적 조우”, 안상훈(편), 「한국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집문당.
- 김경혜 · 조달호 · 박은철, 2009, 「중산층 위기시대의 복지패러다임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김승권 · 최영준, 2014, “적정 결혼연령과 만혼·비혼 원인에 대한 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모, 1982, 「한국사회 계층연구」, 일조각.
- 김영모, 1984, “한국의 사회변동과 계층구조”, 「사상과 정책」, I (2).
- 김용기 외 5인, 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ISSUE PAPER」 8월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윤태, 2015, “한국 사회의 불평등 담론”, 이정우·이창곤 외 27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 김지은, 2013, “एको세대 주택수요 특성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김진성, 2015, “국내 가구의 소득·자산 구간별 부채보유 특성”, 「KB 지식 비타민」 15(4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김진욱·정의철, 2010,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1).
- 김호기, 2008, “중산층과 이중적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편), 「기로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남은영, 2011, 「한국사회의 변동과 중산층의 소비문화」, 나남.
- 남은영, 2015, “사회경제적 안전성: 사회적 위험의 관점에서”, 이재열 외 9인, 2015, 「한국사회의 질—이론에서 적용까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남준우, 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 남상호, 2015, “우리나라 가계 소득 및 자산 분포의 특징”,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77호(2015-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아시아연구원, 2009, 「미래사회 중산층 변동전망과 대책」, 미래기획위원회.
- 류상영·강석훈, 1999, 「중산층의 변화실태와 정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문숙재·최혜경·정순희, 2000, 「한국 중산층의 생활문화」, 집문당.
- 민승규 외 4인,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미래기획위원회, 2009,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제4차회의자료(2009.03.23).
- 박덕배, 2012, 「एको부머의 3대 경제난」, 현대경제연구원.

- 박민진 · 정우성, 2013, “한계중산층 형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소현 · 안영민 · 정규승, 2013, 「중산층 측정 및 추이분석-소득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 박순옥, 2008, “청년층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1개월, 고령층 평균 퇴직연령 53세”, 통계청 정책뉴스(2008.07.24).
- 박종연, 2015, “성인기 주거 불평등과 이중구조”, 안상훈(편), 「한국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집문당.
- 변창흠, 2015, “기रो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 이정우 · 이창곤 외 27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 삼성경제연구소, 2013,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 「SERI 연구보고서」(2013.7).
- 석상훈, 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신관호 · 신동균, 2007,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노동경제연구원.
- 신광영 · 조돈문 · 조은, 2003,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울.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신광영, 2008,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신광영, 2015, “중산층 위기”, 이정우 · 이창곤 외 27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후마니타스.
- 신동균, 2008,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안상훈 편, 2015, 「한국사회의 이중구조와 생애주기적 불평등」, 집문당.
- 여유진 외 4인,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외 3인, 2008,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김대일, 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최바울, 2008, “KDI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1).
- 윤자영 외 6인, 2014,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윤희숙, 2013,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KDI 보도자료
- 이동훈, 2007, “4인4색의 중산층 소비시장”, 「CEO Information」, 619호, 삼성경제연구소.
- 이은우·박동렬, 2013, 「중산층 실태분석과 육성 방안」, UUP.
- 이재열, 2006,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 3차 포럼, 한국사회학회.
- 이재열·남은영, 2008, “중산층의 사회적 관계의 특징”,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이재열, 2008, “한국의 사회통합과 중산층 육성의 과제”,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이정우·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학연구」, 7(2), 79~109.
- 이준협·이용화·백다미, 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안과 과제」, 15(29), 현대경제연구원.
- 이진영, 2015,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KERI Insight」, 15(34), 한국경제연구원.
- 이태진 외 6인, 2011,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미혜, 2008, “중산층의 양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장세훈, 2006, “중산층의 주거 현실에 비춰본 중산층 육성 정책의 방향”, 한국사회학회(편), 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제3차 포럼 자료집.
- 장세훈, 2007, “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 『경제와 사회』 2007년 여름호(통권 제74호).
- 장세훈, 2008, “중산층의 주거현실에 비춰본 중산층 육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조권중·김경혜, 2012,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서울의 공공 사회서비스 구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권중, 2015,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 조동기, 2008,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사회학회(편), 『기रो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최성근·이준협, 2015,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현안과 과제』 15(06), 현대경제연구원.
- 최현수 외 16인, 2012,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 2015,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한겨레 21, 2015, “중산층을 위한 미국은 없다”, 제1084호.
- 한국사회학회, 2008, 『기रो에 선 중산층』, 인간사랑.
- 한상진, 1987,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1집.
- 한완상·권태환·홍두승, 1987, 『한국의 중산층』, 한국일보사.
- 현대경제연구소, 2009,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통권 396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2, “에코부머의 3대 경제난-취업난, 신용난, 주거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12(20)(통권 제491호).

- 홍두승, 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두승, 2008,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편), 「기로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홍두승·김병조, 2008, “한국의 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사회통합을 위한 중산층 육성”, 한국사회학회(편), 「기로에 선 중산층-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홍석표 외 4인, 2003, 「경제위기 전후의 중산·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성민·민주홍, 1999, 「IMF시대의 중산층 약화 실태 및 재구축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앤서니 B. 앳킨슨(Anthony B. Atkinson), 장경덕 옮김,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글항아리.
- 조슈아 쿨랜치(Joshua Kurlantzick), 노정태 옮김, 2015,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들녘.
- Mirror, 2013, Britain now divided into SEVEN classes not just upper, middle and working: Which are you?(<http://www.mirror.co.uk/news/uk-news/>).
- OECD,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19.
- OECD, 2010,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5,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5.
- OEC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 Gini, poverty, income, Methods and Concepts(<http://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 THE WHITE HOUSE, 2013, The President's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 & A Strong America.
-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2010, Middle Class in America.

보도/통계자료

국토교통부, 2015.04.15.,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교육부, 2015.09.0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경제기획원, 1985, “중산층 육성대책”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5.07.27.,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3,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보도자료.

통계청, 2012.08.0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보도자료.

서울시·서울연구원, 2014, 「서울서베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5, 「사교육비 조사」.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2015, 「2014년 사회조사보고서」.

중산층 흔들리는 신화

지은이 조권중 · 최지원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6년 8월 19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디자인·인쇄 알래스카

주소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319

홈페이지 www.si.re.kr

ISBN 979-11-5700-128-6 93330

정가 10,000원

© 서울연구원, 2016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